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떠난 날
2025년 7월 21일

제작
두산아트센터

기획
두산아트센터
이음

지은이
윤신영
안대회
신혜란
임동근
박찬일
양승훈
이정우
조문영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은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두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연록의 저작권은 두산아트센터와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지역 LOCAL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은 보통 경계가 나뉘어진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한 지리적 구분만이 지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관계, 문화가 축적될 때에도 형성된다. 우리가 지역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장소와 공동체가 지역LOCAL이 될 수 있다. 2025년 두산인문극장은 ‘지역’을 다양한 방향에서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지역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본다.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성되고 그곳만의 고유한 성격인 지역성을 갖는다. 고유한 성격은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다른 지역에 형성된 성격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 사이에서만 작용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거리가 먼 곳들 사이의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쏟림’ 때문에 일어난다. ‘지역’이라는 말은 원래 치우침이 없는 말이지만, ‘쏟림’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소외나 차별, 심지어 소멸이라는 현상과 연결되어 대표적인 불평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인류가 탄생해서 이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이 만들어진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온 지역을 인류학, 지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우리가 지역의 중심을 잡고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한다.

두산인문극장 2025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상상은 현실에 갇혀 있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대부분의 상상력의 한계는 물질문명이 제공하는 테두리에 막힌다. 그 테두리를 확장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길이 없다면 새로이 길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산인문극장은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될 미지의 땅에 길을 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빅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를 시작으로 2014년 ‘불신시대’, 2015년 ‘예외例外’, 2016년 ‘모험’, 2017년 ‘갈등’, 2018년 ‘이타주의자’, 2019년 ‘아파트’, 2020년 ‘푸드’, 2022년 ‘공정’, 2023년 ‘나이, 세대, 시대’, 2024년 ‘권리’를 지나 올해는 ‘지역’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공연

- 4.22~5.10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작: 마티나 마이옥 Martyna Majok / 번역: 유은주 / 연출: 이오진
- 5.20~6.7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작: 셀린 송 Celine Song / 번역: 조은정, 임지윤(PIC) / 연출: 이래은
- 6.17~7.5 뮤지컬 <광장시장>
작: 윤미현 / 작곡·음악감독: 나실인 / 연출: 이소영

전시

- 6.4~7.12 전시 <Ringing Saga>
작가: 구동희, 김보경, 안진선, 이유성, 홍이현숙

강연

- 4.7, 4.14, 4.21, 4.28, 6.9, 6.16, 6.23, 6.30 19:30
- 4.7 윤신영 <1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 4.14 안대회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 4.21 신혜란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 4.28 임동근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 6.9 박찬일 <로컬푸드와 장소 정체성>
 - 6.16 양승훈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 6.23 이정우 <서울 공화국이나 균형발전이나>
 - 6.30 조문영 <‘지방소멸’의 시간들>

1강 08 1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윤신영

2강 22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안대회

3강 31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신혜란

4강 40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임동근

5강 50 로컬푸드와 장소 정체성
 박찬일

6강 59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양승훈

7강 70 서울 공화국이나 균형발전이나
 이정우

8강 80 ‘지방소멸’의 시간들
 조문영



윤신영



안대회

1강

1만 년의 고독: 인류의 이동과 지역의 탄생

윤신영

과학기자, 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 《과학동아》 기자 및 편집장, 《동아일보》 과학 담당을 거쳐,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과학기술 및 기후 에디터를 지냈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를 묻다』, 『인류의 기원(공저)』 등을 쓰고 『화석맨』 등을 번역했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https://youtu.be/CLQqbD-Bahw>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개념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중심지, 도시 또는 수도(메트로폴리스)의 반대 개념으로 지역을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삶과 잇닿은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이해합니다. 지리적으로 넓게 흩어진, 또는 분산된 여러 공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지역은 어디고 그와 대비되는 메트로폴리스는 어디일까요.

시계를 5만 년 전, 10만 년 전, 30만 년 전, 100만 년 전, 300만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의 지역과 메트로폴리스는 지금과 같을까요.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탄생과 멸종을 거듭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공간으로 확산, 이동해 왔습니다. 이 무대의 지역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5만 년의 고독: 멧돼지, 소, 그리고 새-인간의 시대

그림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한다며 갑자기 왜 그림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의 정의는 모호하고 범위는 넓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류의 지적 성취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 문화나 문명, 삶이 탄생하고 발전하며 주변으로 확산하는 곳이 있다고 상정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 문화가 꽃핀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지, 메트로폴리스로 정의하겠습니다. 지역은 이런 곳의 다양한 지리적 분포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중심지와 대비되는 여타 장소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판 1]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리앙 테동계 동굴에서 발견된 4만 5,500년 전 멧돼지 그림. 2023년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상화 벽화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오래된 벽화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5만 년 전, 인류가 그림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Maxime Aubert/사이언스 어드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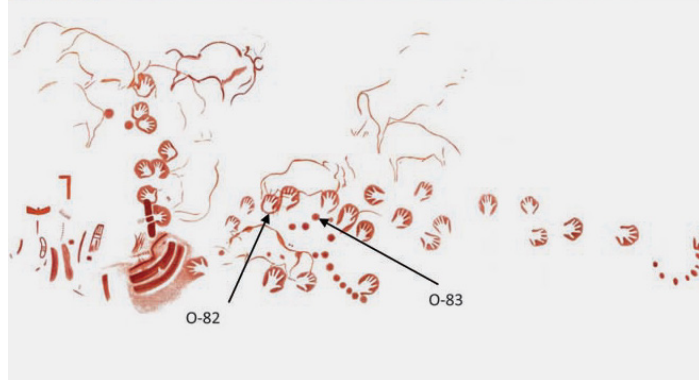
문화는 증거를 남깁니다. 오늘날에는 언어로, 문자로 흔적이 남겠지만,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시대는 아직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문화의 탄생과 확산이 이뤄졌음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물적 증거는 다름 아닌 그림, 그 중에서도 벽화입니다. 벽화가 발견된 지역과 그곳에서 나온 그림을 통해, 당시 문화의 주된 발상지와 그 확산 양상을 짚어보려 합니다.

동굴의 벽화는 알게 모르게 동서양 고고학자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던 주제입니다. 지중해 북부를 중심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등 남부 유럽에 연대가 1만~3만 년이 넘는 동굴 벽화가 다수 발견돼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름을 들어봤던 프랑스 쇼베,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점이나 원반 모양으로 안료를 칠한 추상화나 손바닥 모양의 스텐실, 동물 그림까지 매우 다채로운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동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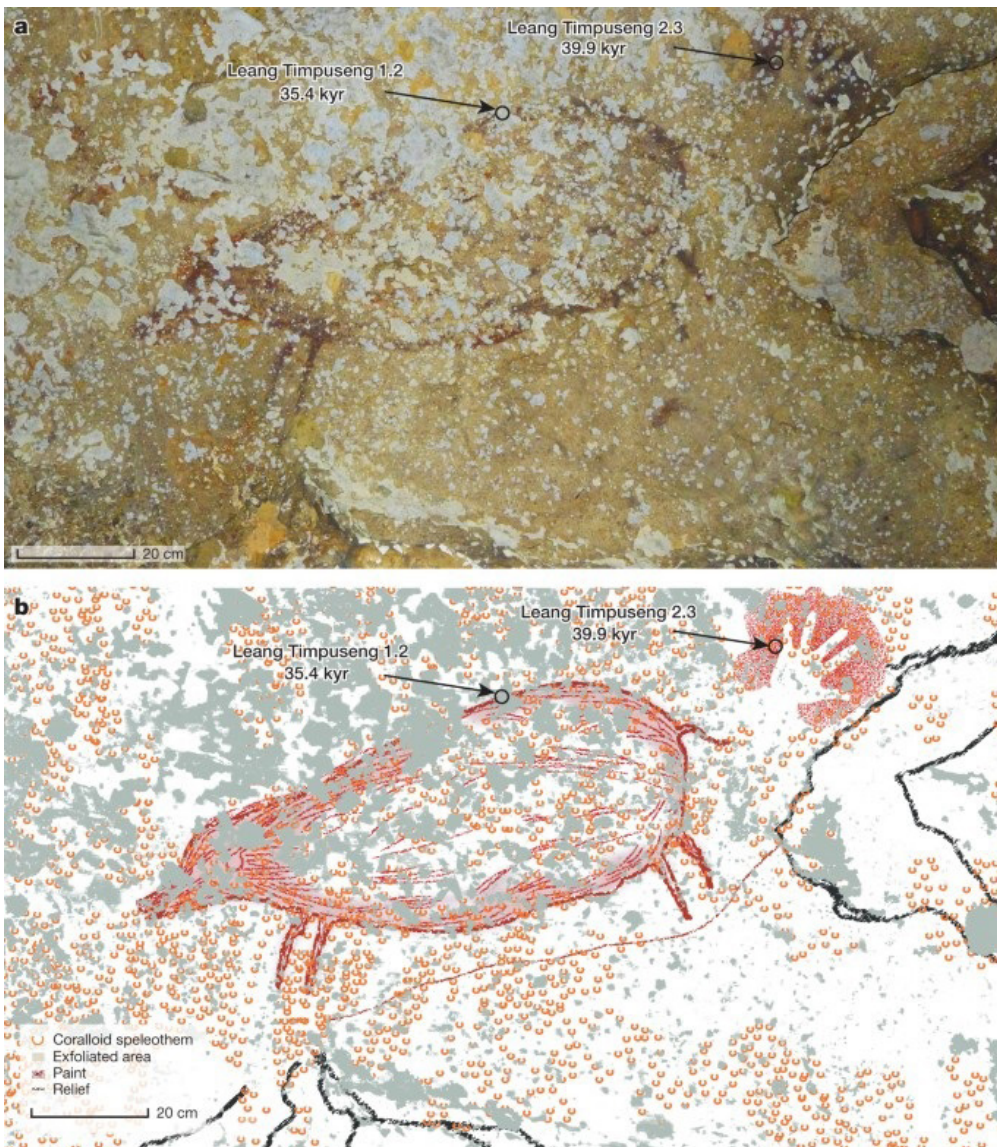


[도판 2] 2012년, 스페인 엘 카스티요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최고 약 4만 년 전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위 그림에서 O-83으로 표시된 작은 원반 모양의 부분입니다. O-82로 표시된 손바닥 스텐실 역시 약 3만 7,000년 전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언스



말부터 들소, 하이에나까지 다양했고, 이들을 사냥하는 장면이 묘사된 그림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대체로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약 4만 5,000~4만 년 전 유럽에 도착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이들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기하학 도형을 그리다가 점차 구상화를 등장시켰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래된 벽화가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유럽, 그것도 남부 유럽에 밀집해 있다 보니(유라시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예술 유적 수는 약 280곳인데, 대부분 남부 유럽에 몰려 있습니다), 예술 고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벽화 예술의 시작이 유럽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벽화 예술은 선사시대 인류가 이런 지적 문화 유산의 최고봉으로 꼽히지요. 유라시아 다른 곳에서도 드물게 벽



[도판 3] 2014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동굴 벽화. 연대가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손바닥 스텐실과 함께, 3만 5,000년 전 멧돼지 그림이 나왔습니다. 당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상화였죠. 오래 이어져 온 유럽 중심의 기록을 깬지만... 이 기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네이처

화가 발견되곤 했지만, 이들은 유럽에서 전파된 결과물이라고 봤고요. 유럽 외 다른 지역 벽화의 제작 연대가 남부 유럽만큼 오래되지 않아, 이를 반박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니다.

이 같은 고정관념은 2012년, 스페인 북부 엘 카스티요 지역의 일부 동굴 속 벽화(도판 2)의 연대가 최고 약 4만 년 전으로 측정된 연구 결과가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강화됐습니니다. 이 연대는 절묘하게도 현생인류가 유럽에 도착한 즈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논문에도 “유럽에 막 도착한 현생인류가 원반 형태 등 추상적 형태를 그리다가 점차 구상화를 그리게 됐다”는 해석이 언급됐습니니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예술이 (네안데르탈인 등 다른 친척인류가 아닌) 현생인류의 고등한 정신 능력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행간에서 읽히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변화가 생겼습니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동굴 벽화 속 손바닥 스텐실(도판 3) 연대가 4만 년 전이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니다. 적어도 유럽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약 1,000년 이른 시기에, 아주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에서도 벽화가 발견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발견된 '바비루사(술라웨시 말로 '돼지 사슴'이라는 뜻)'라는 지역 토종 멧돼지 그림의 연대가 3만 5,000년 전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까지 발견된 유럽의 어떤 구상화보다 오래된 그림이었습니다. 역대 최고最古 구상화 기록을 아시아의 벽화가 깬 것이었죠.



[도판 4] 2018년,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인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 지역 루방 켈리지 살레 동굴에서 발견된 4만 년 전 동물 구상화. 소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Luc-Henri Fage/네이처

기존 정설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예술이 어느 한 곳(유럽)에서 탄생해 퍼진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죠. 또는, 인류가 유라시아 동서로 퍼지기 전 아프리카에 살던 시기에 이미 벽화를 그렸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서 먼저, 단독으로 벽화가 탄생했을 가능성은 기각됐습니다.

엘 카스티요와 술라웨시의 동굴 벽화가 큰 주목을 받은 이후에도 굵직한 발견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계속 기존 고정관념을 깬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인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 지역 루방 켈리지 살레 동굴에서 4만 년 전 동물 그림이 발견됐습니다(도판 4). 가장 오래된 구상화 기록을 다시 썼죠. 손바닥 스텐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연대가 무려 5만 2,000년 전으로 측정됐습니다.

2019년에는 4만 3,900년 전 그림이 역시 술라웨시 섬 남부 리앙 불루 시퐁4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도판 5). 이 그림에서는 특히 멧돼지, 소 그림과 함께 새의 부리나 꼬리를 지닌 이상한 사람(반인반수)이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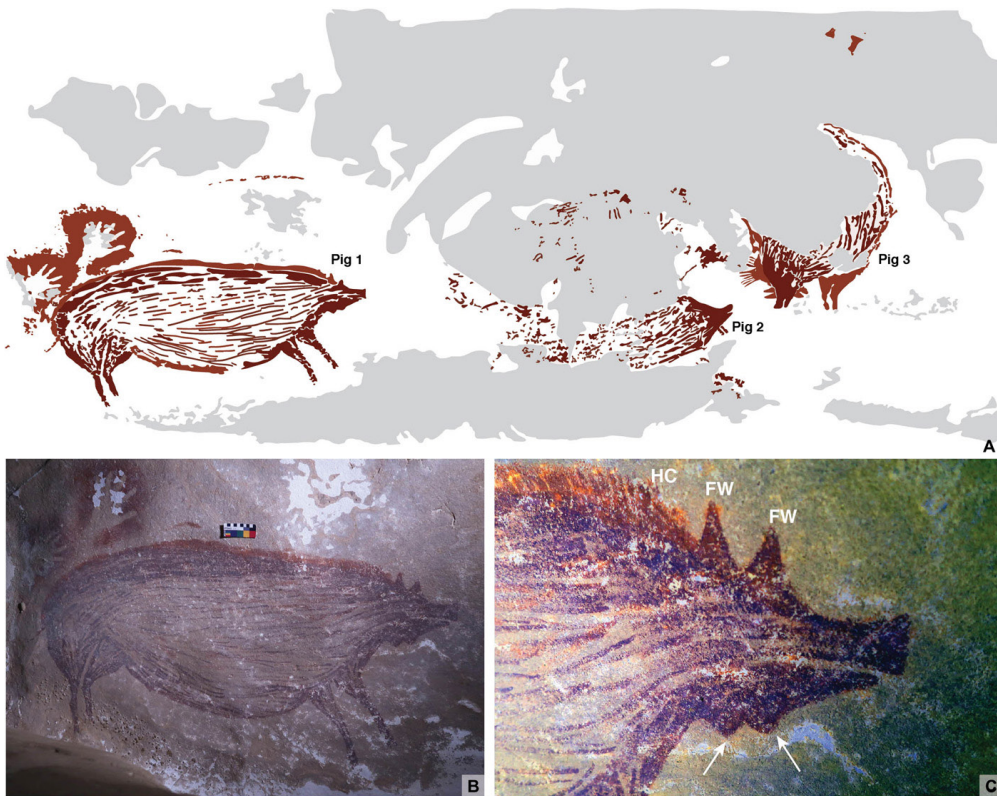
[도판 5] 술라웨시 섬 남부 리앙 불루 시퐁4 동굴의 벽화 일부. 커다란 소 모양의 동물(오른쪽)을 사냥하는 다수의 사람(왼쪽 작은 존재)이 묘사돼 있습니다. 새 부리 모양 등 반인반수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Ratno Sardi/네이처

있습니다. 자연과 인물, 그리고 이들 사이의 교류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일종의 사냥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당시까지 발견됐던 사냥 묘사 작품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래된 작품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존 기록은 2만 1,000년 전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였는데, 기록을 크게 앞당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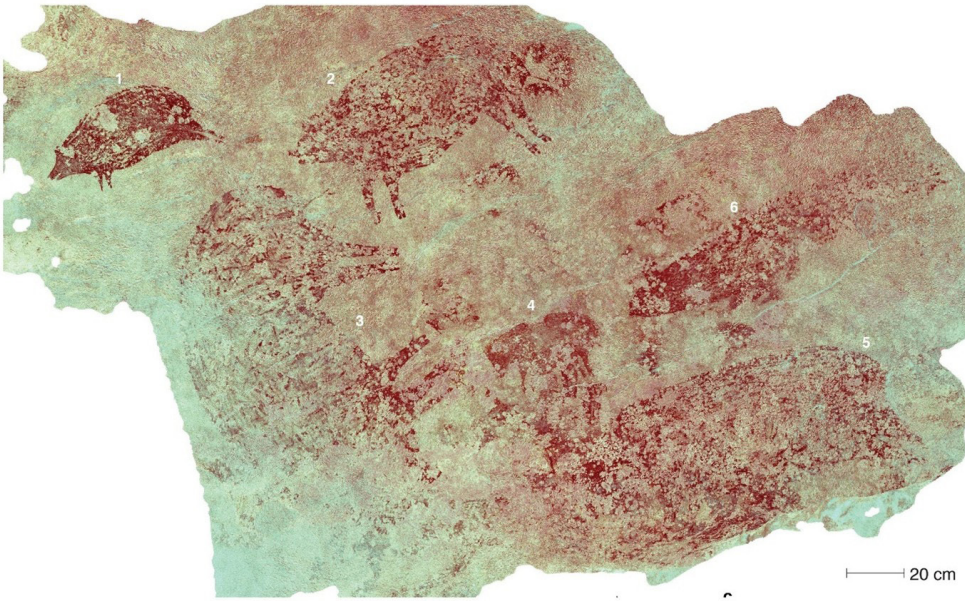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림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제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반인반수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조합해 유·유에서 무한한 유·유를 창조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이형우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동남아에서 사냥이 생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에 대단히 귀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역사 현장을 그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모두 이례적인 그림이자 인류의 인지 능력과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이러던 차에 2021년, 또 다른 그림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4만 5,500년 전 벽화가 술라웨시 섬 리앙 테동게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도판 6). 이 그림 역시 멧돼지 바비루사를 묘사했으며, 당시 가장 오래된 구상화로 기록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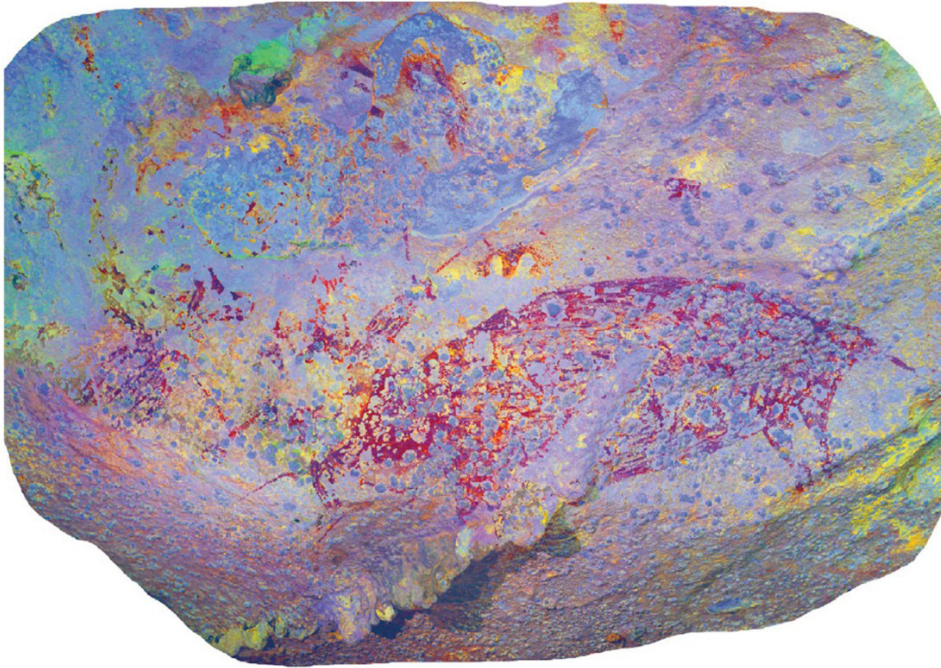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 기록을 다시 5,700년 앞당겼습니다. 인도네시아



[도판 6]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리앙 테동게 동굴에서 발견된 4만 5,500년 전 멧돼지 그림입니다. 2023년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상화 벽화였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도판 7] 2024년 7월 발견된 인도네시아 리앙 카람푸앙 동굴 벽화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묘사한 벽화 중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입니다. 다수의 멧돼지가 보이며(위), 일부에서는 사람과의 교류가 묘사돼 있습니다(아래). 연대가 5만 1,200년 전으로 추정돼, 사람과 동물의 교류를 담은 서사적 작품 중 이전 최고最古 기록보다 5,700년 앞선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피스대/네이처



아 술라웨시섬 리앙 카람푸앙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도판 7)가 5만 1,200년 전 그림으로 밝혀지면서, 서사적 ‘스토리’를 담은 구상화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 동굴 벽화에는 인간과 비슷한 인물 세 명과 동물(돼지)이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류가 기존 추정보다 훨씬 빠른 시기부터 자연과 인류의 관계를 정교하게 묘사한 서사적 예술 작품을 창작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동굴 벽화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탄생한 것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발굴된 또 다른 벽화의 연대를 추정한 다른 ‘사이언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동굴 벽에 그려진 추상화 및 구상화(도판 8)를 대상으로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다양한 연대가 나왔는데요. 범위가 이상합니다. 놀랍게도 추상화 부분의 일부 그림은 제작 연대가 6만 4,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현생인류가 유럽 땅에 들어오기 약 2만 년 전입니다. 현생인류보다



[도판 8]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동굴 벽에 그려진 그림. 소를 연상시키는 일부 구상화와 함께 다양한 추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다리 모양의 그림 일부는 연대가 6만 4,000년 이상 이전으로 측정됐습니다. 유럽에 현생인류가 없던 때죠. 네안데르탈인이 그리고 현생인류가 화답한 ‘이어 그리기’의 흔적일까요. C.D Standish, A.W.G. Pike and D.L. Hoffmann/사이언스

먼저 유럽 땅에 있던 네안데르탈인이 벽화를 그렸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지요.

이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대가 과장돼 측정됐다는 반론도 있어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 벽화라는 고등한 예술 작품의 주인은 현생인류라던 공고하던 고정관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비록 벽화는 아니지만, 2021년에도 네안데르탈인이 뼈에 무늬를 새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동굴에서 발견된 5만 1,000년 전 사슴 뼈에 일정한 패턴의 선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인위적인 디자인의 결과라는 주장이죠. 스페인 지브롤터의 동굴에서는 3만 9,000년 전에 만들어진 해시태그(#)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이 그림(도판 9) 역시 네안데르탈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상징물이라는 주장도 2014년 제기돼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예술은 유럽인이나 동남아시아인 어느 한 인류에게서 먼저 탄생한 예술도 아니고, 심지어 호모 사피엔스의 생산물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생인류 이전의 친척인류를 포함해 여러 인류가 산발적으로 성취한 문화적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마지막으로 공존했던 시기에 현생인류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배웠을 가능성까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도판 9] 지브롤터에 새긴 네안데르탈그림? PNAS

물론,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 외에 복잡한 구상화만큼은 현생인류가 그 주인공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멧돼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리앙 테동계에서 발굴된 돼지 그림(도판 1)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런 정교함과 비유적 묘사가 이뤄진 초기 표현주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해부학적 현생인류가 만들었다”며 “이들의 작품으로 보는 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현생인류 이전에 유라시아에 거주했던 친척인류들이 사냥했던 멧돼지 바비루사만이 최초의 구상화를 그린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있겠네요.

10만 년, 30만 년, 100만 년, 300만 년의 고독: 이동하는 인류, 상류와 하류

벽화의 제작 연대 경쟁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벽화, 그 중에서도 구상화라는 고차원적인 문화의 산물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를 통해 우리는 인류 문화의 주류가 어디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 지역에서 먼저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는지, 아니면 여러 곳에



[도판 10] 벽화 예술 탄생의 비밀을 모두 목격했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멧돼지 바비루사. 하지만 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Masteraah/위키미디어

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발견된 벽화의 분포는 그저 우연한 결과일 뿐인지 논의할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발견 지역에 편차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지적, 문화적 성취가 (비록 일시적이었을지언정)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문화적 중심지와 지역의 구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지면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5만 년 전까지 되돌렸습니다. 5만 년 전까지의 시기는 미묘한 시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약 30만 년 전 탄생한 현생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한창 확산하던 시기입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열대 및 아열대 해안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좀 더 성큼성큼 퍼졌고, 척박한 내륙을 따라 동쪽으로는 더디게 퍼졌습니다. 이 시기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몹시 추운 빙하기와, 상대적으로 덜 추운 간빙기가 교차했습니다. 5만 년 전 전후는 빙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인 약 2만 년 전은 마지막 빙하기 중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최후빙기 최성기였습니다. 나날이 추워져가던 지구에서, 현생인류는 봄에 대한 기대 없이 현실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 걸음씩 미지의 땅으로 영역을 확장해갔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그곳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손바닥, 멧돼지, 소, 새 머리를 한 인류를 어두운 동굴 안에 그리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긴 추위와 개선의 기약 없는 척박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간절했던 마음으로 짙은 동굴 속 손바닥 스텐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었다”는 인류의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어렵풋하게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제목에 ‘고독’을 붙였는지입니다. 물론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술에서, 인류는 바로 우리 현생인류만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현생 인류가 벽화를 그리고, 문화를 일궈으며 고등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인류’가 단 하나의 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 선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종의 인류를 만난 적이 없죠. 우리는 고독한 종입니다. 1만 년의 고독, 5만 년의 고독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수십만 년간 자리를 잡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고(앞서 유럽 벽화 일부를 이들이 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했죠), 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호빗’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작은 인류 플로레스인(호모 플로레스iensis)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의 호모 루조넨시스, 아시아 내륙과 멜라네시아의 데니소바인까지 다양한 친척인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렉투스(자바인), 플로레스인, 현생인류, 루조넨시스 등

이 살던 동남아시아 일대는, 아마 당시 인류의 다양성이 집약된 메트로폴리스 중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이들 친척인류 상당수의 존재 시기는 약 5만 년 전까지입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던 이들 친척인류가 있었지만, 5만 년 전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현생인류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확산하던 때와 일치합니다. 현생인류가 이들이 사라진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 인류가 유라시아 각지에 분포하던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춘추전국시대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0만 년 전, 비교적 뒤늦게 먼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리호리하고 키 큰 인류 종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인류가 지역을 분할해 공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프리카는 많은 인류를 탄생시킨 요람으로, 인류의 생물학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그곳에서 태어나 살아가며 경쟁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메트로폴리스를 딱 한 곳만 꼽으라면, 아마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동아프리카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들 틈에 뒤늦게 등장한 무명의 신인 호모 사피엔스는, 그 일부 그룹이 고향을 떠나면서 이전의 인류가 발자취를 남겼던 지구 곳곳에 빠르게 진입했고, 열대 아프리카부터 극지역과 태평양의 먼 섬까지, 지구 모든 곳을 차지하며 단일 종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역사에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인류 진화 역사도 비슷합니다. 5만 년 전 일어났던 일은 시기를 100만 년 전으로 돌리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다만 그 때의 주인공은 호모 에렉투스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약 180만 년 전, 우수한 체격과 지능을 갖춘 다양한 인류가 아프리카에 살았지만, 가장 성공적이었던 호모 에렉투스가 유라시아까지 확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계를 300만 년 전으로 돌리면, 작고 왜소하며 눈에 띄는 장기라고는 두 발로 푹 푹하게 걸을 수 있다는 점뿐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다양하고 특색있으며 강한 신체적 능력을 자랑하던 다채로운 다른 인류를 앞지르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후손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유인원과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던 한 무리의 유인원은 수백 만 년 뒤 자신의 후손이 단 한 종 살아남아 80억 개체로 늘어나며, 이들이 전 지구 구석구석에 퍼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원래 종은 서식지가 분화하면 신체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고, 서로 고립된 채 진화해 새로운 종 또는 아종으로 분화합니다. 각각의 종이 생태계의 작은 차이와 틈에 근거해 태어나고 생존

합니다. 이것이 지구에 막대한 다양성을 낳은 근원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달랐습니다. 단 한 종만이 살아남았고, 이들은 신체가 아닌 문화의 힘으로 크고 작은 환경 차이를 극복하며 지구 전역에 퍼졌습니다. 동시에, 먼 거리를 가로지르며 교류하고 소통하며 여전히 단일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종의 대형 포유류 80억 개체가 지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는(전 지구에 퍼져 사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낯선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역입니다.

향후 위대한 문명을 건설할 호리호리한 한 종의 먼 조상은, 미지의 땅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밝은 땅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그들은 거쳐 간 모든 땅을 자신들에게 의미있는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때로는 이들 사이에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생산성과 문화, 부와 풍요, 창의성, 적의, 인구, 기술, 협동성... 그 모든 차이의 복잡한 조합이 각각의 땅을 다른 곳과 다르게 했습니다. 그곳은 지리적으로 넓게 흩어진 여러 공간이었고 인류의 삶과 잇닿은 가장 가까운 현상이었으며, 때로는 중심지, 도시, 수도(메트로폴리스)와, 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의 탄생이 인류에게 축복이였는지, 또는 저주였는지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만 덧붙이려 합니다.

이제 인류는 다양한 지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지구 상의 유일한 종이 됐습니다. 이 여정이 마무리되기가 무섭게, 인류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 다행성 종족이 되려고 합니다. 인류를 지역적 존재로 만든 문화적 적응의 기원인 지적 능력 측면에서는 인류를 뛰어넘는 기억력과 사고 속도를 지닌 기계,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역시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가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적 능력과 문화를 통해 원래의 신체 능력을 증강했고, 빙하기라는 혹독한 자연의 위협을 이겨내며 유일무이한 지역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위협이 닥친 시기에, 지역地域과 고유한 지능이라는 한계마저 풀고 다음 존재가 되려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맞이할 준비는 돼 있을까요.

2강

조선 후기 국토의 발견과 살 곳의 모색

안대회

현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장, 문과대학 학장 및 한국한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에 제34회 두계학술상을 받았고, 2016년에 제16회 지훈상 국학 부문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SKKU-Fellowship 교수로 선정되었다. 2024년에는 제38회 인촌상 인문·사회 부문을 수상하였다. 정밀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를 바탕으로 옛글을 고증하고 해석해 왔으며, 담백하고 정갈한 문체로 선인들의 글과 삶을 풀어내 왔다. 지은 책으로 『한국시화사』, 『조선의 명문장가들』, 『담바고 문화사』, 『궁극의 시학』, 『벽광나치오』, 『조선을 사로잡은 끈들』, 『정조의 비밀편자』, 『선비답게 산다는 것』,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등 다수가 있고, 옮긴 책으로 『명심보감』, 『채근담』, 『해동화식전』, 『한국 산문선』(공역), 『완역 정본 택리지』(공역), 『내 생애 첫 번째 시』, 『북학의』 등 다수가 있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https://youtu.be/D1QP8LyVWsw>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18세기 조선 사람의 국토지리에 대한 관심

조선에서는 국토지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여 관리했다. 조선 왕조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과 《여지도서輿地圖書》(1757)를 편찬하여 행정과 군사, 교통 등 공공의 목적과 수요를 위해 종합적이고 표준적인 정보를 집적하였다. 유형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1656)와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6)는 개인이 편찬한 지리지이나 목적과 체제는 앞의 저서와 큰 차이가 없다. 각 시대를 대표하여 국가와 개인이 만든 4종의 지리지는 연혁·풍속·관부·학교·토산·효자·성곽·산천·누정·역원·명현·제영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8세기는 조선의 지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폭증하던 시기인데 저와 같은 표준적인 정보만 집적한 지리와는 다른 인문지리서가 등장하였다. 먼저 지도 제작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지도가 등장하였다. 국토의 자연적·인문적 요소를 반영하여 정교하게 제작한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는 국토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조선 말기까지 이 지도의 연장선상에서 국토지리를 인식하였다.

18세기 중반에 관찬 지리서가 제공해온 정보의 범주를 넘어 새롭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택리지》가 출현하였다. 저자 이증환은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국토지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지리지를 내놓았다. 국토를 지역별로는 <팔도론>, 주제별로는 <복거론>으로 양분하여 설명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지리학사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택리지》는 18세기 전반기 지리 정보를 실정에 부합하게 설명하여 국토지리의 참모습을 궁금해하는 독자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였고, 지리에 관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였다.

18세기 조선 사람의 거주지에 대한 관심

거주 공간의 선택과 관련한 주제가 학문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일은 조선시대의 근엄한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풍수가風水家 또는 지관地官이나 집주름에게 맡겨야 할 실무로 간주하였다.

고려는 물론 조선에서도 수도를 정하고 설계하는 국가의 사업에서부터 개인의 집자리와 못자리를 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풍수에 능한 지관이나 승려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맡았다. 풍수설에는 거주 공간의 선택과 주택 건축

에 관하여 설명한 체계적인 양택론陽宅論이 있었고, 그 이론은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최적의 묘지를 도판으로 그려 제시한 명산도明山圖처럼 전국 국토에 관한 적지 않은 지식까지 축적되었다. 합리적 지식과 술수 차원의 주장이 뒤섞인 풍수적 주거론은 오랜 경험을 축적하여 거주지 선택의 분야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풍수설에서 축적해놓은 정보와 지식을 대체할 만큼 거주 공간에 관한 유가 사대부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사대부 학자들이 풍수설의 술수로부터 독립하여 거주지 선택을 두고 담론을 활발하게 펼친 시기는 상당한 후대의 일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전국 단위로 지역 산물과 경제, 풍속 등을 논한 것이 그 시초이다. 남인 학자 허목許穆(1595~1682)의 『지승地乘』과 이웅징李熊徵(1658~1713)의 『동방식화지東方食貨志』, 이재운李載運(1721~1782)의 『해동화식전海東貨殖傳』 등이 상업이 발달한 지역을 부각하여 특정한 땅에 관심을 유도하면서부터 전국에서 특정한 지역의 거주지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논의가 태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좁은 지역이 살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 여부를 따지지는 않았다.

한편, 홍만선洪萬選(1643~1715)은 생활 백과의 성격을 지닌 저술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복거卜居’를 책의 맨 앞에 두어 거주지 선택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책을 대폭 보완하여 유중림柳重臨(1705~1771)은 1766년 여름에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를 편찬하였는데 여기서도 ‘복거卜居’를 첫 번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거주지 선택은 다른 모든 생활상의 주제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임을 ‘복거’ 항목의 설정은 말하고 있다. 다만 ‘복거’ 항목에서는 주택의 결정, 위치, 건축법, 금기 등 다방면의 원칙과 기술을 다루되 여전히 풍수설의 술수에 속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선택이란 주제에 집중하거나 구체적 지역을 폭넓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중환 『택리지擇里志』의 거주지 담론

거주지 선택을 본격적으로 담론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인물은 청담 이중환淸潭 李重煥(1690~1756)이다. 《택리지》는 목적과 체제가 이들과 완전히 다른, 개인 창작물이었다. 이중환은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국토지리를 해석하고 평가한 지리지를 내놓았다. 국토를 지역별로는 <팔도론>, 주제별로는 <복거론>으로 양분하여 설명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지리학사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복거론>은 제목에서 확인되듯이 살 곳을 선택하는 주제이다. 《택

리지》는 18세기 전반기 지리정보를 실정에 부합하게 설명하여 국토지리의 참 모습을 궁금해하는 독자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였고, 지리와 거주지에 관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였다. 관찬 지리서가 제공해온 정보의 범주를 넘어 거주지 선택에 관한 새롭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250여 년 동안 독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택리지》는 저술의 기본 취지가 거주지 선택이었다. 이중환은 낙토樂土를 찾아가 살고 싶은 욕구를 국토의 평가에 도입하였다. 《택리지》라는 서명은 ‘마을 선택의 지침서’를 의미한다. 원래 서명인 《사대부가거처士大夫可居處》는 ‘사대부가 거처할 만한 곳’이란 의미로 주거지 선택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택리지》는 1750년대에 나온 주거지 선택의 지침서로 유사 이래 처음 보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저술이었다.

상황을 현대로 옮겨 가볍게 이해하면, 어느 동네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고 어떤 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값이 오를지 지역별로 분석하거나 조건별로 따져보아 예측한 것과 같다. 그만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상의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잘못된 정보나 비현실적 지식, 도식적이고 낡은 정보를 내세울 여지가 없다.

《택리지》는 “당신이라면 어디에 살겠는가?”라는 질문을 설정하고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전에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설령 개인적으로야 질문해보았다고 하더라도 저술의 주제로는 처음 나온 질문이자 해답이었다. 이중환은 직접 전국 각지를 탐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여 조선 팔도의 거주지를 다각도로 평가하였고, 그중에서 최적의 거주지를 제시하였다. 이전에는 보지 못한 혁신적 시각과 내용을 담았고, 이주를 소망하는 욕구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이중환이 선별하여 제시한 거주지는 실제로 사대부들에게 이주의 욕구를 부추겨 담론의 대상으로 크게 떠올랐다.

이중환은 사대부 신분에 적합한 거주지에 주목하였고, 사대부 학자들은 그의 시각에 크게 공감하였다. 또 사대부에게 적합한 거주지는 다른 신분 사람에게도 적합하기 쉬우므로 신분을 떠나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중환은 한 지역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전국을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각도의 주요 지역을 거주할 만한 곳可居處과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고 그로 인해 신분을 유지하는 지상의 과제를 안고 사는 존재였다. 게다가 조선 왕조는 중앙집권 정책에 극단적인 지역 차별 정책을 펼친 나라였다. 그런 조건은 거주지 선택에서 전국

을 공평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경기와 충청도, 강원도와 같은 국토의 중심 지역을 중시하고, 국토의 외곽지역을 홀대하는 시각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중환이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명승으로 평가한 낙토를 당대 독자들은 깊이 공감하고 주목했다. 그만큼 《택리지》는 사람들이 이주하고 여행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훗날 이규경李圭景(1788~?)은 “사는 곳의 선택에 관한 책은 이중환이 처음 저술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책에 많이 현혹되어 폐단이 끝없다.”라고 걱정했다. 《택리지》의 판정에 따라 땅을 평가하고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났기에 우려한 것이다. 이런 부정적 시선이 있기는 했으나, 이중환은 당시 누구보다 지리 현상을 잘 포착하여 지역의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평가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예측과 판단 때문에 먼 후대의 독자까지도 그에게 공감을 표시했다.

『택리지』의 거주지 선택론 실제

《택리지》는 주거지로 선택하여 살 만한 곳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크게는 광역의 도에서 작게는 특정한 마을까지 제시하였다. 옛날부터 이름난 주거지로 알려진 곳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이중환이 새롭게 내세운 곳이다. 주거지 선택에 관한 논의는 이 책에서 처음 시도됐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다룬 것도 처음이었다.

이중환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복거론〉에서 제시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네 가지였다. 구체적 지역을 평가할 때 네 가지 기준을 균형감 있게 적용하였다. 길으로는 ‘지리’가 가장 앞선 기준이고, ‘산수’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로는 달라서 ‘생리’를 최우선에 두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전국에 종합적으로 적용한 〈팔도론〉에서 ‘생리’를 다른 기준보다 더 중시하고 빈번하게 적용했다. 주거지 선택을 생리의 문제로만 환원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한 것은 분명하다.

생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비중을 높게 잡아서 거주지를 선정할 때 생업과 이익의 관점을 우선하도록 이끌었다. 이것은 이전에 보지 못한 창안이었다. 나중에 이규경은 이중환의 관점이 “오로지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라고 지적하여 지리를 경제적 시각으로 보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중환의 독창적 시각을 담은 《택리지》가 널리 읽히면서 사람을 현혹하여 폐단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보았다.

일반 지리지에서는 행정 중심지에 집중해 서술하였으나, 이중환은 경제

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지방과 현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택리지》에서 주목한 장소에는 기왕의 지리서에서 주목하지 않은 곳이 많다. 대개는 국가의 행정 체계나 지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지식의 보편적 체계에 편입되지도 않은 곳이었다. 이증환은 그동안 참고할 근거가 없는 지역을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새 중심지로 부각하고 주거지로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정을 반영한 현실 속 정보에 근거하였고 과거의 낡은 지식과 정보는 무시하였다. 이처럼 《택리지》에서는 지방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서 혁신적 태도를 보였다.

혁신은 팔도의 행정 중심지인 감영監營 소재지의 서술과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팔도의 경제, 교통, 이동을 논할 때 감영 소재지가 중심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증환은 감영 소재지와 주요 거점 도시의 비중을 축소하였다. 널리 알려진 지식과 정보를 줄인 대신 인구, 경제, 교통과 같은 실질적 지표로 지역을 평가하여, 새로이 번창하는 지역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소개했다. 그의 지역 평가는 현실적이고 모험적이었다. 《택리지》에서 새롭게 조명한 지방이 어디인가를 분석하면 그의 지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증환이 경제 중심지로 주목한 곳은 원산, 강경, 광천, 목포, 법성포, 유궁포由宮浦(예산) 등지의 포구와, 한강과 낙동강, 예성강, 금강 수계에 있는 교통요지였다. 이 지역은 일반 지리지에는 나와 있지 않거나 그다지 큰 비중을 두어 언급하지 않았다. 포구는 사대부의 관심에서 먼 곳이었다. 반면 이증환은 포구를 물류가 집중되는 도회지이자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상업활동이 번성한 지역으로 주목하였다. 지성사에서 포구가 지닌 지리적 가치를 이렇게 주목한 저술은 처음이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전국에 분포한 포구와 창고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그가 주목한 경제 중심지에는 원산이나 목포처럼 근대 이후 본래의 행정 중심지를 대체하여 지방의 거점 도시로 부상한 곳도 있고, 강경이나 광천, 법성포처럼 200~300년 동안 경제 중심지로 번성하다가 20세기 이후 쇠락의 길을 걸은 곳도 있다. 두 지역을 차례로 살펴서 이증환의 시각을 알아본다.

20세기 이후 함경남도 행정과 교통,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한 원산시는 덕원부德源府의 영흥만에 있는 어촌이었다. 그래서 원산이 급부상한 시기는 구한말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많은 지리서와 현대의 백과사전까지도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을 왜곡한 설명이다. 원산은 인조 이후 함경도 일대의 곡물을 비축해두는 원산창元山倉이 설치된 이래 경제적 활력이 넘쳐 전국의 3대 포구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문헌 기록이 많지 않다. 반면에 이증환은 〈팔도론〉 ‘함경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안변에서 서북쪽은 덕원(德源) 경내이고, 그 바닷가에는 원산촌이란 마을이 있다. 포구에 모여 사는 백성들은 물고기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잇는다. 바닷길이 동북쪽으로 육진(六鎭)과 통하여 육진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고을의 상선들이 여기에 돛을 내리고 정박한다. 무릇 생선과 소금, 해삼, 울이 가는 고운 베, 가벼운 다리, 담비, 산삼, 널 만드는데 쓰이는 목재 따위의 물건이 모두 여기 원산촌에서 팔려나간다. 따라서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도, 경기도 등지의 많은 상인들이 밤낮으로 떼를 지어 몰려들고 온갖 물산들이 쌓여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백성들 가운데 물건을 사고파는 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조정에서는 여기에 원산창(元山倉)을 설치하여 경상도의 곡물을 뱃길로 운반해 창고에 쌓아 두었다. 함경도에 흉년이 들거나 필요한 때에 여러 고을에 그 곡물을 뱃길로 곡물을 운반하여 진휼(賑恤)하는 물자로 삼았다. [이중환, 85~86]

‘함경도’의 서술 비중은 다른 도에 비해 낮고, ‘함경도’ 안에서는 국경지대와 함흥 그리고 원산의 서술량이 가장 많다. 국경지대와 감영 소재지 함흥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도회지를 제치고 원산에 큰 비중을 둔 것은 뜻밖이다. 더욱이 행정 중심지인 덕원부 소재지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데 비해, 덕원부에서 15리 떨어져 있는 어촌인 원산촌을 대도회(大都會)로 규정하고 현황을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처럼 원산은 활력이 넘치는 도내 제일가는 경제 중심지로서 입지를 분명히 서술했다. 17세기 이후 구한말까지 대부분 지도와 지리지에서 원산을 덕원부의 작은 어촌으로 서술한 관례와는 전혀 단편이었다.

이중환은 각 지방의 경제 동향을 민감하게 포착하였고, 경제 중심지를 주거지로 주목하여 지역 정보로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국가의 미곡 창고가 설치된 곳이 교역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충청도 지방에서 공세호(貢稅湖)와 가흥창, 금천, 내창, 목계 등지의 창고 소재지에 물산이 집중되고 사람이 모여들어 도회지로 변신하는 실상을 묘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중환 이후의 거주지 선택론

이중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저술에는 2종이 손에 꼽힌다. 먼저 두세 세대 이후의 학자인 연경재 성해응(硯經齋 成海應, 1760~1839)이 『명오지(名塢志)』를 지었다. 성해응은 『택리지』에서 주목한 지역과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이 책을 저술

하였다. 이중환이 가거처라 부른 살기 좋은 집터를 명오名塢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고, 이중환의 서술을 대거 수용하되 자신의 전문과 관점을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명오지에서는 경기 39곳, 호서 48곳, 영남 19곳, 호남 11곳, 관동 13곳, 해서 2곳으로 모두 132곳의 명오를 선정하였다. 그 서문에서 명문가의 후예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므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안 되므로 경기와 호서에 거주지를 두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그 지역의 명오를 특별히 자세하게 서술한다고 밝혔다. 그 원칙에 따라 관서와 관북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해서 지역은 외지고 누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간략히 다뤘으며, 영동과 영남, 호남은 토착민이 아니면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적은 수만을 다루었다. 그에 따라 오로지 경기와 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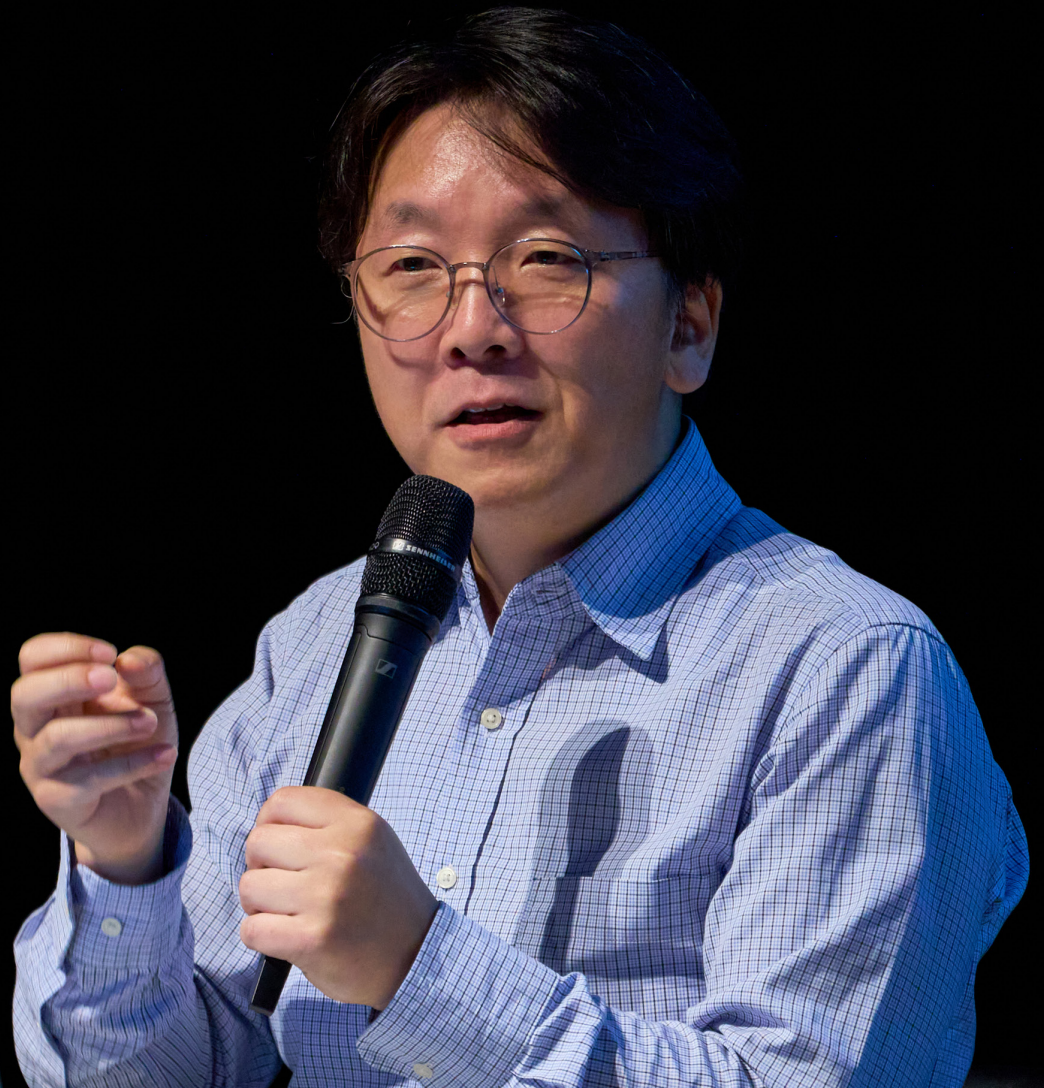
서유구徐有榘(1764~1845)는 이중환과 성해응을 계승하여 좋은 집터를 폭넓게 다뤘다. 그의 『임원경제지』 권107과 권108에 수록된 제15지 『상택지相宅志』는 본격적으로 거주지와 주택의 문제를 다룬 보기 드문 저술이다. 『상택지』는 새로운 집터를 장만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기초로 삼아 이상적 거주 공간을 장만하려는 사대부의 보편적 욕망을 학문 차원으로 승화하여 서술한 책이다. 『상택지』 제2권은 전국의 살기 좋은 집터의 조건과 실재를 서술한 ‘팔역명기八域名基’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팔역총론八域總論: 8항목. 팔도 인문지리의 포괄적 설명.
2. 명기조개名基條開: 8개 부문 233조. 팔도 각 지역의 좋은 집터를 표제로 세워 그 특징을 설명.
3. 명기품제名基品第: 6항목. 강과 개천, 산, 호수, 바다의 특정 지역에 있는 거주지의 평가와 소개.

명기조개名基條開에서 8도의 233군데 거주지를 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82곳, 호서 56곳, 호남 17곳, 영남 25곳, 관동 42곳, 해서 5곳, 관서 3곳, 관북 3곳이다. 성해응이 제시한 거주지와 비교하면 거의 곱절로 확대되었다. 성해응의 『명오지』에서 125곳을, 자신의 저술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에서 77곳을, 그리고 『택리지』에서 20곳을 전재하였다. 기타 문헌에서는 21곳을 전재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도 중심으로 서술하되 다른 도로도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



신혜란



임동근

3강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 이주와 정체성

신혜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8년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있다.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연구방법으로 정치지리, 도시정치, 이주 주제를 연구한다. 대표적 저서로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The Cultural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가 있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https://youtu.be/vTFYxVJxcks>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이 강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본질은 관계와 소속감에 있다는 점이다. 지역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논의는 영토성과 인구소멸 문제, 그리고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정체성 정치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주민의 존재는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영토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며, 사회적 갈등이나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셋째, 정체성은 단일하고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넷째,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에 있어 지역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만나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하거나 어우러지는 장소가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가 형성된다.

‘지역’의 본질은 관계와 소속감

‘지역’이란 무엇인가? 이주가 지역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역을 구성하고, 또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누구를 ‘우리’로 포함하고 배제할지를 결정하며, 이주라는 현상은 그 ‘우리’의 경계를 흔든다. 이로 인해 이주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 지역은 이처럼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먼저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local은 공간, 사람, 활동이 상호작용하며 특정한 특징을 형성하는 단위이다. 이 단위는 국가의 상위일 수도, 하위일 수도 있으며, 항상 관계와 정체성과 깊게 맞닿아 있다. 지역은 단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도 이해된다. 이는 지역이 단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역은 행위자actor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이며, 이는 특히 지역 정책에서 강조된다. 정책에서 지역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지역은 점점 더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은 또한 과정process으

로도 설명된다. 지역은 사회적 실천과 더 넓은 권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의미를 형성하는 제도적 구조와 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분석은 관계적 접근과 지역 중심 접근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면, 지역은 관계적이다. 이는 곧 지역이 권력과 불평등이라는 요소와 얽혀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지역은 정체성과 경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관계적 접근이란 지역을 정체성과 연결된 사회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이며 경계가 없는 동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다. 지역의 제도화는 지역과 정체성을 분석적으로 결합하는 출발점이 된다. 지역과 경계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종종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오히려 지역을 더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든다. 관계적 사고relational thinking는 지역을 고정된 경계로 보지 않고, 이러한 사고는 지역의 네트워크화로 이어진다. 즉, 지역은 사회적 내용과 관계들이 고정된 경계를 넘어 연결되며, 이러한 네트워크화 과정이 지역을 구성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지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고대에는 지역이 주로 자연적 경계, 즉 산맥이나 강과 같은 지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지역이 행정구역이나 경제적 생산 단위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역이 산업 중심지로 구분되었고, 자본주의는 이러한 지역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현대에는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지역의 경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지역은 더 이상 국지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체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간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은 공간과 장소 사이에 위치한다. 공간space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개념이며 물리적 위치, 규모다. 반면 장소place는 공간이 인간의 경험, 정체성, 그리고 기억을 통해 구체화된 개념이다. 즉, 장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특정한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받은 공간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관점에 따르면, 지역은 권력의 공간적 표현이다. 즉, 지역의 경계와 구조는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동시에 생산한다. 권력은 공간을 통해 실현되며, 지역은 그러한 권력의 시각적, 제도적 장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사회적 공간의 생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몸과 공간, 지역과 장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 푸 투안Yi-Fu Tuan의 논의에서는 공간에서 지역을 지나 장소로 향하는 연속선상에서, 지역은 이 둘 사이에 위치한다. 지역이 공간처럼 물리적 경계를 가지면서도, 장소처럼 인간 경험과 정체성을 포함하는 중간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역은 공간적으로 확장 가능하면서도, 특정한 문화적·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 지역은 물리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 기억이 결합된 존재이다. 장소가 주로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반면, 지역은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지역은 특정 공동체의 기억, 전통, 가치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며, 이는 장소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은 인간 활동과 정체성이 교차하는 사회적 맥락이다. 지역은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우리 지역’, ‘지역성’, ‘지역사회’와 같은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지역은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공간적 표현이기도 하다. 지역은 단지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 권력 관계와 사회적 배제가 스며든 공간이기도 하며,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곤 지역처럼 상반되는 공간들 사이에서 관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정체성은 정치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은 지역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투쟁의 기초가 되는 사례이다.

소수의 이주민이 왜 중요한가?

이주민은 한국 전체 인구 5%가 되지 않는데 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일까? 이주민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이동의 문제를 넘어, 영토성과 인구소멸 문제, 그리고 이주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정체성 정치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게 된다. 즉, 누가 ‘우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유발하며, 그 ‘우리’를 구성하는 방식이 변동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새로운 상상력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개념은 유연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지역은 관계적 개념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이주는 지역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체성의 다중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포용적인 지역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주와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포용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근대국가 형성 이후 군사적, 경제적, 사상적 단위인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는 재편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즉 자본의 이동은 점점 자유로워졌으며, 개인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임시적이고 반복적인 이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동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통치governmentality와 연결되어 있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발전시켜 요르겐 올레 베렌홀트Jørgen Ole Baerenholdt는 ‘이동통치governmobility’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동통치란 (비)이동을 통한 통치governing through (im)mobility를 의미한다. 이동을 장려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이 사람들의 이동 실천 속에 내면화되며, 사회가 이동과 비이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구축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결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였다. 사람들은 그 통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동이 위협하고 배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고 쿨한 일로 여겨졌다.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주로 우려하는 것은 이주민이 잘 적응하여 수용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한국으로 시집왔으니 한국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 문화적 수용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이주민 통합 정책의 역사와도 연결된다. 동화이론Assimilation Theory은 1920년대부터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이주자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론은 ‘이주자들이 결국 동화할 것이며, 동화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수용 사회 중심의 통합 논리가 강했고, 이주자 밀집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등장한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는 이 동화이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초국적주의는 이주민이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다I am here and there’는 식의 초국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주민들이 본국과 도착국 모두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민 밀집 지역은 사라지기는커녕 유지되며, 오히려 확대되고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국적주의는 강력한 대안으로 나타나 동화이론을 비판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동화와 초국적주의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고, 복합적이고 진화하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 최근에는 ‘동화’라는 용어 대신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이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단지 이주민들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동 이전에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중적이다. 게다가 이주민의 몸을 둘러싼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경계는 끊임없이 재협상된다. 국가는 이동을 통해 이주민을 통치하고, 이주민은 그 논리를 일상 속에서 내면화하며, 그들의 이동은 국가로 하여금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주민은 누구와 친해질까? 많은 경우, 이주민들은 선주민에

게 동화되기를 기대하거나 의식하지만, 실제로는 선주민과의 교류는 얇은 편이다. 오히려 다른 이주민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하며, 그들 사이에서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로 다른 출신지에서 왔더라도,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공통된 경험’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이주민들은 비슷한 문제—예컨대 외로움, 제도적 불안정, 차별의 가능성,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지망이 되어준다. 이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단지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이주민뿐 아니라 이동을 못하게 하거나 이동을 촉진하는 생태계에 집중하는 논의가 증가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경계 긋기bordering와 인프라 짓기infrastructuring의 과정을 통해 이주를 관리하고 구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이동 레짐regime of (im)mobility이다. 이 레짐은 단순한 정책 수준을 넘어서, 통치, 규범 형성, 도시의 구성 방식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이주민의 거주지 분포, 교통 접근성, 행정적 이동의 제약, 문화시설 이용 가능성 등은 모두 (비)이동 레짐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방식을 보여준다.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

정체성은 단일하고 안정된 실체가 아니다.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구성물이다. 개인의 정체성도, 집단의 정체성도 고정된 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시간과 공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지역의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영토적 형성뿐 아니라 지역의 이름, 문장, 노래, 문화적 특징과 같은 상징들을 창출하는 상징적 형성, 제도적 형성, 사회적 인식을 통해 지역은 형성된다. 그 과정과 결과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역사와 이동성 또한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지역 정체성은 더욱 복잡한 이동성과 경계 생산 과정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단일한 공간에만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서 공간적 경험을 쌓는다. 이로 인해 지역 정체성은 복수화되고, ‘두 지역 살이’와 같은 복합적 공간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지역 정체성은 권력, 이동성과 맞물리며 복잡하게 구성된다. 하지만 지역 정체성은 권력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어떤 요소는 강조되고, 어떤 요소는 배제되며, 이는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명명과 상징화 과정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

면 단일 이미지를 내세우는 흐름이 장소마케팅 도시개발 전략에 많이 나타난 것
이나 스마트도시, 창조도시와 같은 도시브랜딩과 등수 매기기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지역’이 중요해진 것도 정체성과 관계있다. 첫째는 정체성의 강화
이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과 지역성은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
성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세계화는 문화를 동질화시키고, 전통과 지역
적 차이를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과 문화를 재발견하거나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
문에 대한 답을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관습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지역 간, 국경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발전과 함께 정책적 의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 지역 내 불균형은 국가 안팎의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지역(로컬)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전통, 관습, 경제 활동은 글로벌 균질화에 대한 대
안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슬로우푸드 운동은 지역적 식문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또한, 초국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국가 경계를 넘어선 지
역 간 협력, 즉 초국경 지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지역은 글로벌화 속에서도 새
로운 경제·정치적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이 자신의 정
체성을 너무 강하게 고정하거나 내부 구성원을 지나치게 동질화하려 할 때, 그
지역은 외부인을 배척하거나 타자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지역 정체성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방과 지역은 중심과의 관계, 범위의 넓이, 사용 맥락, 감정적 반응 측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중심과의 관계에서 지방은 주로 중앙(수도)에 대
비되는 주변부를 의미하는 반면, 지역은 특정한 공간적 단위로서 중립적으로
사용된다. 범위의 넓이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 위계적이며 중심과 주변의 관계
를 암시하는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지역은 중첩적이고 포괄적이며 정
체성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사용 맥락에서도 지방은 “수도권 대 지
방”처럼 정치적, 행정적 구분에 주로 사용되지만, 지역은 “지역 경제”나 “지역
협력”처럼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맥락에서 자주 등장한다. 지방은 소외감을 불
러일으키고 주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역은 정체성, 자부심과 같
은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에서 지역의 역할

장소 만들기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여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독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사람을 위해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공간은 장소가 된다. 이때 지역은 장소와 비슷한 의미, 혹은 장소의 장소이다.

‘다양성의 장소 만들기’에서 지역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장소 만들기는 지역 안에서 이뤄지며, 장소의 정체성과 의미는 결국 지역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다. 지역 안에서 장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장소들은 다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지역의 한옥 마을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장소성을 강조한 사례이다. 장소는 그 자체로 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대표하는 요소가 된다. 서울의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반대로, 지역적 정체성이 특정 장소 만들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자산은 장소 만들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장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이야기와 상징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 기억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형성된다. 예를 들어, 부산의 감천문화 마을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마을은 원래 피난민들이 정착한 낙후 지역이었으나, 그 역사성과 지형적 특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 예술과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며 ‘문화마을’이라는 새로운 장소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

결국 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역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과 의미 부여, 그리고 장소와 장소성의 중첩을 통해 재구성되는 공간적 산물이다. 따라서 지역은 언제나 공존과 변화를 통해 재구성된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고유성과 다양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경계가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 만들기’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도시 공간 안에는 이미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주민들이 협력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포용적 지역 만들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커뮤니티 행사나 장소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례는, 지역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갱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시민들이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도시

를 함께 만들고 형성할 수 있는 권리,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 권리는 교통, 통신, 주거, 문화 시설 등 인프라를 사용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다양성·다문화·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 제도와 계획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 거주자의 권리와 같이 도시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이후 이 개념은 발전되어, 단지 도시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도시 지역city region’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었다.

이런 권리가 중요한 것은 공간적 역량을 확대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다. 공간적 역량은 사람들이 거주, 노동, 휴식을 위해 공간을 이용하고, 공간형성에 참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 즉 사회적으로 그런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소 만들기는 도시권과 공간적 역량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지역과 장소 만들기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과 거버넌스를 다층적 규모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가 지역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특정 지역이 장소 만들기의 주체가 되기도 하며, 그 안에서 정체성의 붕괴와 재구성이 반복된다. 다양성과 권리를 중심에 둔 장소 만들기과 지역 만들기는 공존, 연대, 차이,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함께 상상하는 과정이며, 오늘날 도시와 지역 연구, 정책 실천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지역과 우리, 나의 영토성은 끊임없이 변화, 재구성되는 관계적 구성물이다.

4강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현상

임동근

도시지리학자.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시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축소 도시 문제, 식민지 시기 교육 공간 연구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 사회의 공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저서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에서 유목하기』 등이 있으며, 리처드 세넷의 『살과 돌』을 비롯한 주요 도시이론서들을 번역했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https://youtu.be/mctKZmXULiQ>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출산’은 미지의 영역

‘저출산’, 오늘날 누군가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출산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혹은 태어나는 아이가 별로 없다는 ‘저출생’과 비슷한 의미로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정확한 정의를 찾지는 않겠지만 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지점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의 정확한 표현은 ‘저출산율’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구 유지를 보여주는 출산지표로 ‘합계출산율’보다 더 먼저 개념화된 ‘재생산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출산’은 지금과 같은 출산 수로는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지표에 따라 명명되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생각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출산’, 인구학에서 출산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구학은 사망표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사망은 보험과 연금이라는 지식이 가치화되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반면, 출산의 지식은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결된 수많은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에 속하지만, 누가 이 지식을 구매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지식의 시장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대학문이 본격적으로 출산을 설명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이고, 그것도 인구학이 아닌 경제학이었습니다. 인구 팽창을 경고하는 토머스 맬서스 Thomas Malthus, 신의 섭리로서의 출생을 말하는 요한 쥐스밀히 Johann Süßmilch 등 19세기까지의 ‘출산’은 인구를 세고 표를 만들고 수식으로 예측하는 오늘날의 인구학과는 거리가 먼 증명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출산’ 지식의 출현

서구에서 인구의 지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훑어봅시다. 17~18세기 출산은 사회의 명운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은 1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해가 단 7년에 불과할 정도로 전쟁이 빈번했고,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인구 손실의 대책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정치경제사에서 언급되는 중상주의, 중농주의 등의 사상은 이런 전쟁, 인구, 식량의 문제와 밀접합니다. 인구는 군사력의 기반이자 경제생산력의 원천으로 국가의 핵심 구성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구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산수단(가축, 토지 등)과 유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의 힘을 논하면서 사람, 말, 소 등이 나열되는 식입니다.

인간이 다른 생산수단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순간은 전쟁이었고, 특히 총기의 사용이었습니다. 물자가 풍부함에도 병사가 없으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고, 소총은 칼과 활 등 기존에 중요했던 병사 능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또한 18세기, 지난 세기부터 이어져온 전쟁의 충격으로 몇몇 황폐화되는 지역의 출현과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권력 집단에서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쇠퇴의 전조로 여기고, 출산하지 않는 개인은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는 등 다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시작되고 인간을 하나의 수로 보는 과학이 출현합니다. 학문적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인간, 그리고 이어지는 출생과 사망의 역동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지식적 욕구 등이 출현한 겁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출산과 관련된 이론들이 체계화됩니다. 아르센 뒤몽Arsène Dumont은 전통적인 계급사회가 해체되면서 중간계급이 자녀 수를 제한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극빈층과 최상류층의 자녀 수가 중간계급보다 많은, 소득에 따른 유U자 형 출산곡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랑드리Adolphe Landry는 자발적 출산제한을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발현된 근대성의 지표로 해석하기도 하고, 알프레드 로카Alfred Lotka는 생물학적이고 수학적인 모델로 인구를 모델링합니다. 인구 예측 기술 또한 발전하여 연령별 출산율을 통해 연령 구조에 따른 인구 성장을 추정하고, 후에 이는 합계출산율 등의 지표로 이어집니다.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사회적 현상으로 출산을 설명하며, 종교, 교육, 도시 등 사회적 요인을 주목하고, 개인의 선택과 사회구조의 영향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등 오늘날의 학문과 유사한 모습을 갖춰갑니다.

‘출산’의 결정요인을 알기 위한 노력

1956년 킹슬리 데이비스Kingsley Davis와 주디스 블레이크Judith Blake는 출산을 설명하는 이론의 틀을 발표합니다. 전통, 종교 등을 포함한 사회 규범과, 계층, 직업 등과 같은 경제사회구조 내 개인의 특성이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 다양한 처지 등, 출산에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학자는 원인과 출산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를 제시합니다. 비슷한 시기(1953년, 1961년) 루이 앙리

Louis Henry는 자연출산과 계획출산을 구별하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인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존 봉가츠John Bongaarts는 ‘밀접한 결정요인’을 추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출산율을 계산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 많은 출산 관련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UN의 인구 분과 탄생에 일조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프랑스 인구연구소INED를 중심으로 출산 연구의 큰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프린스턴 인구연구소의 수장이었던 프랭크 노트스타인Frank W. Notestein은 특정 사회에서 출산이 감소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합리적으로 이해를 따지며 출산해야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출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야 하며, 셋째, 출산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의 이 주장은 제3세계의 산아제한 정책에 사용되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각해봅시다. 1947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 ESC의 통계위원회 첫 번째 모임이 뉴욕에서 열립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1945년 UN 헌장Charter 제10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1946년 18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946-1947년은 경제사회이사회에의 여러 기능별 위원회commission들이 만들어진 해였습니다. 인구위원회는 처음 위원회 구성에는 없었지만 1946년 10월 3일 ESC 결의로 설립됩니다. 이 인구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된 것 중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선, 11번 1947년 연구 사업 중 신탁통치지역의 인구 연구와 관련한 지침입니다.

XI. Programme of work for 1947 : Special studies

A. Studies of the Population of Trust Territories

...

31. 인구 통계 연구는 가능한 한 다음 질문들에 우선적으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 (a) 과거 인구 증가의 동향과 현재 인구 수치.
- (b) 출생률 및 사망률 (특히 유아 사망률), 평균 기대 수명 및 인구 증가 전망.
- (c) 직업 및 교육 수준별 인구 분포.
- (d) 해당 지역 내 특정 구역의 인구 밀도 및 분포.
- (e) 인구 이동.

32. 이 질문들은 성별 및 연령 그룹과 해당 지역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민족 및 인종 그룹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전쟁 전후의 인구를 같이 비교할 수가 없기에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평균 기대 수명 등은 과거의 동일한 연령대의 사망 자료를 갖고 추산해야 하지만 전쟁 시기의 자료를 갖고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직업, 교육 수준별 인구 분포, 특정 구역의 인구 밀도, 인구 이동은 전쟁 시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인구 자료, 더 정확하게는 노동력 자료이기 때문에 인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는 특징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회의의 13번 내용에서는 인구 성장을 바랐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XIII. Population losses in devastated areas

40. 인구위원회는 황폐화된 지역 재건은 인간적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해야만 하고, ESC는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구 손실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당시의 인구 문제는 인구 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이 두 번째 회의에서는 표준화된 국제 인구 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통치에 대한 인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됩니다. 왜 그럴까요.

2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947년 8월 16일에 내린 결정(E/513, 88 (V))에 따라 신탁통치이사회는 임시 질의서(T/44)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인구에 관한 질의서 항목들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임시 질의서를 시행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추후에 인구 관련 질문들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현재 형태의 질문들이 광범위한 조사 항목일 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구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신탁통치 영토에 관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체적인 인구통계 데이터 유형과, 질의서의 수정본에 포함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질문 목록에 관한 설명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 설명과 질문들이 개별 신탁통치 영토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첫 번째 모임에서 시작한 인구 연감 Demographic Year-Book 논의는 두 번째 회의에서 목차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중 출산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V. NATALITY

*19. Total number of births

Five-year averages 1920~1934 or 1921~1935 and single years 1935~1947 or 1936~1947. Births should comprise live births onl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year-book) and notes should be appended regarding incompleteness of registration or differences in definition or tabulation procedures resulting in omissions of live births.

1920~1934년 또는 1921~1935년의 5년 평균과 1935~1947년 또는 1936~1947년의 개별 연도별 수치. 출생은 생존 출생만 포함해야 하며(연감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등록의 불완전성이나 생존 출생 누락을 초래하는 정의 또는 집계 절차의 차이에 관한 주석을 첨부해야 한다.

*20. Crude birth rates

Should correspond to item 19, calculated on comparable midyear or average populations.

21. Births by month of occurrence

*22. Births by age of mother and father

Data for mother have priority.

*23. Fertility rates by age of mother

*24. Births by parity

25. Births by legitimacy

*26. Births by duration of marriage

*27. Stillbirths

*28. Gross and net reproduction rates

29. Ratio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to women aged 15 to 49 years

* 우선순위

이후 1949년 UN은 인구 조사 방법을 ‘인구 연구’ 제4호로 발표합니다. 이제 UN의 지도 아래 전 세계의 출산율이 국가별로 조사되기 시작하고, 1960년대가 지나면 각 국가별로 출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제시됩니다. 지구의 인구가 얼마이고,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 거고, 세계 인구가 몇 십억을 돌파했는지 등 인구와 관련된 지식들이 재편됩니다.

1970년대 세계 인구정책의 출발, ‘산아제한’과 출산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

1970년 12월 UN 총회는 1974년을 ‘세계 인구의 해’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 인구 연구Population Studies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인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파악이 가능한 것은 지난 10년간 제3세계에서 진행된 가족계획 정책의 효과이기도 했고, 출산 및 사망 자료의 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출산율의 급증은 없다 하더라도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세대가 1970년대에 들어서 출산 연령대가 된다는 사실, 즉 당시의 연령 구조만으로도 새로운 출생자들의 급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출산할 연령대가 이미 연령 구조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제 30년 뒤인 2000년의 인구 예측도 가능한 일이 되었고, 그 결과 1970년 36억 명의 지구 인구가 2000년 65억으로 거의 두 배 증가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앤슬리 콜Ansley J. Coale이 1960년대 고안한 네 개의 지표가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출산 통제 프로젝트에 동원됩니다. 합계출산지수는 혼인지수, 합법적 출산지수, 혼외 출산지수의 함수로 표현되고, 모든 지수는 재생산 기간 내 연령 구조에 따라 표준화됩니다. 1974년부터 1981년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의 세계출산조사WFS가 진행되고, 1978년 봉가츠는 세계 전역에서 실시된 조사를 통합하는 간소화된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식은 ‘최대 생물학적 출산’, ‘결혼의 영향’, ‘모유 수유 빈도와 산후 불임의 영향’, ‘피임의 영향’, ‘낙태의 영향’, 다섯 개의 변수로 구성됩니다. 이 식은 그 자체로 정의된 출산 방정식도 아니고 다섯 개 이외의 수많은 변수들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한 예측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간단한 지표로 전 세계의 인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설픈 큰 그림이 일단 등장하자 구체적인 지역의 출산과 관련된 세세한 분석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다학제적인 ‘미시 인구학’의 시

대라 부를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룹니다.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는 서유럽에서 가족과 어린이의 위상과 관련해 베이비 붐과 산아제한을 설명합니다. 인류학자 존 콜드웰John Caldwell은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부의 흐름’을 분석하며 다자녀가 이로운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공존하는 사회 모습을 그립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충족’이란 말로 표현되는 가족의 가치와 출산을 연결합니다. 수잔 그린할그Susan Greenhalgh는 사회적으로 각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다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출산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학자들은 저마다 마르크스주의의 노동력을 둘러싼 정치경제적인 힘들로 출산을 보기도 하며, 씨족 사회에서 국민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의 이야기에서 단연 오늘날 출산의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학이었습니다.

출산의 경제학과 가족계획 프로그램

처음 출산을 경제학의 주요 언어로 설명한 사람은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입니다. 1957년 그는 ‘아이를 원하는 것’(아동에 대한 수요)은 ‘내 구재’ 소비 수요의 미시경제이론의 틀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음식, 집, 여행 등 개인이 소비하는 여러 소비재 중 하나가 ‘출산’입니다. 1970년대까지 그는 ‘비용편익’이라는 접근으로 소득과 아동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따르면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다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 지출하는 소비는 계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빈민이 다자녀를 갖기도 하고 부자들도 소수의 아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면 할수록 경제학과 멀어지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처신, 같은 소득을 가진 이들의 서로 다른 자녀관 등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등 비판을 받습니다.

1970-80년대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에 따른 시간 개념이 등장하면서 라이벤스타인의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시어도어 윌리엄 쉘츠Theodore William Schultz와 시어도어 폴 쉘츠Theodore Paul Schultz 등이 기여한 모델은 총소득과 함께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삼습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소득자에게 자녀에 투자하는 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동일한 시간

축이라는 겁니다. 즉,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녀를 안 낳기도 하는 등 소득만으로는 출산의 방정식을 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리처드 이스터린 Richard Easterlin은 수요/공급 균형이란 고전 경제학적 접근으로 아이를 더 낳는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 편익 곡선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출산의 경제학적 해석이 발전하는 시기가 전 세계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위의 각 이론과 주장 중 여러 단편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제3세계의 인구정책을 결정했고, 선진국 내의 사회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경제학과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인 여러 변수들을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의 출산율을 설명할 수 있고, 각 변수에 정치적 힘을 가하면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희망을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젠더 문제, 사회적 가치의 문제, 사회생물학적 견해 등이 뒤섞이며 출산은 때론 인간 생명체를 탐구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로, 때론 국가 및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때론 일상생활이란 미시사회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저출산,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이렇듯, 출산을 다루는 여러 학문의 이야기는 20세기 중반 이후 진행된, 비교적 짧은 시기의 논의일 뿐입니다. 1990년 수잔 그린할그가 여러 출산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하나의 이론을 만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1970~80년대의 여러 이야기들은 출산을 설명하는 명쾌한 지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라는 전세계에 만연한 인구학적 현상은 어쩌면 단일한 출산이론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다 제각각인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문해봅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출산의 사회적 메커니즘은 미궁에 빠지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단순하고 편협해지고 그 안에서 저출산 담론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 위로 인구, 국가, 지방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말하는 언론, 지방의 낮은 출산율을 타개하는 마지막 순간(골든타임)이라는 식의 말들 속에 감춰진 의미와 맥락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박찬일



양승훈

5강

로컬푸드와 장소 정체성

박찬일

요리사, 음식 칼럼니스트. 『노포의 장사법』, 『백년식당』 등 한국 음식문화의 현장에 관한 여러 저서들이 있다. 이탈리아 요리와 와인을 전공했으며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사를 쓰고 있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https://youtu.be/yZ3z5ClOpSw>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어떤 음식이든지 지역에 존재하게 되면 그 음식에서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스스로 성장하고 이야기를 갖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테면 냉면의 경우, 단순히 한겨울에 김치국에 말아먹던 산골 음식이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의 인문적인 감성이나, 심지어 친구 사이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기호의 단계로 다투게 만드는 서사를 획득하게 되었다.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드는 거리’라는 뜻의 운중가는 종로3가까지만을 가리키며, 이곳 종로5가는 사실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서사를 살펴 보면, 종로5가 주변에는 관청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거주지가 많았다. 광화문에 있었던 전통적인 시장들은 근대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외곽의 상설 시장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서울도 커지게 되었다.

이를테면 남대문 시장은 조선 초 태종 때쯤부터 국영 창고의 역할을 했고, 여기서 이어져서 약간 이어진 형태로 남대문 시장이 시작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전에 근대적인 시장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시장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었다. 남대문 시장이 소비 시장으로서 큰 역할들을 해 나가다가 서소문에 어시장을 분리해 내기도 했다. 서소문의 어시장은 이후 노량진 시장으로 기능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번개시장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번개시장은 원래 무허가 시장이다. 공용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형태다. 그러나 누구도 단속은 하지 않는 채 계속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장소성이 한번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공적 권한으로 쉽게 없애기는 어렵다. 결국 서울의 종로5가가 갖는 힘은 청계천을 따라 동대문까지 이어진다. 조선 중기 이후 생산력과 물류가 활발해진 이 공간의 힘을 우리는 실물을 보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다.

창신동은 봉계 산업의 가장 허부 구조를 떠받치는 동네였고, 과거 이북 출신 사람들이 서울에 정착하게 된 곳이었다. 이북은 전력 공급, 특히 수력 발전이 가능했던 지역이었고, 중국과 가까워 연료 수급도 용이했기 때문에, 거대한 재봉 공장이나 제분 공장 같은 산업 시설이 주로 그쪽에 세워졌다. 그러던 중 남북 분단과 전쟁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북에서 산업 기반을 다지던 많은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들이 서울 창신동에 정착하면서 봉계 산업의 기틀을 세웠다. 음식 문화에 담긴 장소성 또한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시대성을 모두 담보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의 지역성

1999년 이탈리아 남쪽 시골 마을의 한 식당에 견습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주인의 요리 솜씨가 형편없었다. 그래서 짐을 싸서 떠나려는데, 주인이 내 어깨를 탁 치면서 말하길, “야, 요리는 손으로 하는 건 하수고 입으로 하는 게 고수야.”

그는 요리 실력이 좋지만 각광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방에 두고, 자신은 홀에 나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냐 하면,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한 5천 원 하는 멸치 10마리를 시장에서 사다가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였다.

비결을 궁금해하는 나를 그는 새벽에 차를 몰고 어디론가 데려갔다. 벼랑을 지나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착한 곳은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이었다. 호두만 한 까만색 화산재가 길에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은 화산재가 날려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런 곳에 버섯을 캐러 가는 농부들을 만났다.

에트나의 버섯에서는 미네랄이 응축된 것 같은 맛이 난다. 버섯은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시칠리아에는 비가 1년에 300~400mm밖에 안 올 뿐더러 비가 화산재 토양 밑으로 모두 빠져버린다. 그래서 버섯으로 태어난 개체는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물방울을 악착같이 빨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든 치열하게 겨루는 곳에 가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주인은 이러한 버섯을 농부에게서 사면서 꼭 직접 꺾었다.

주인이 알려준 피자집 이야기도 있다. 그 피자집은 시칠리안 카카오인 카롭보의 껍질을 장작으로 써서 구운 피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시칠리아는 변방이고, 과거 지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버려진 도시’였다. 그 도시에서 견과류의 껍질, 즉 버려지는 재료를 불태워 피자를 만든 것이다. 카롭보로 구워낸 피자는 참나무 장작으로 구운 것보다 풍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서사를 획득하니 값을 더 내고서라도 먹는 음식이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힘이다. 외부인의 눈에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싶은 이야기들 말이다. 지역의 것은 어떤 경우에는 더 맛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주게 되면 뭔가 얻는 이익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마음에 로컬이 승리할 수 있다.

물론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지금은 실리의 시대이자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실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수세 국면이기도 하다. 미디어나 SNS에 잘 노출되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로컬은 굉장히 약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에 지역성이 있을 수 있는가?

현재 서울은 개성에서 약 70~80km 떨어져 있으며, 과거에는 개성의 위성 도시로 기능했다. 유사시에는 한강이라는 자연적 방어선을 끼고 있었고, 강 북쪽의 산세를 이용해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입지였다. 이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정은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천도할 준비를 했고, 태종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 서울은 조선의 수도로서 5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현대에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성과 사회적 경험들이 서울 전역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지뢰밭처럼’ 터져 나오는 역사적 맥락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이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일본은 조선 반도 자체보다는 만주로의 진출을 더 큰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조선은 그 경유지 또는 보급 기지로 여겨졌다. 물자와 인력은 주로 배편을 통해 부산에 도착했고, 이후 철도를 따라 경성을 거쳐 만주로 이동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서울은 단지 경유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도시였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적 축적과 문화적 기반은, 식민지 시기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층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지역성이 생성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수도에 지역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로컬local에 대한 인식이 시작될 때 흔히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그러나 ‘중앙’ 역시 공간적·사회적 층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그 안에서도 분명한 지역성이 존재한다. 행정적으로는 ‘중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지역이 얽히고설켜 만들어낸 집합체로서의 도시인 것이다. 서울의 지역성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서울을 ‘한성’, ‘도성’ 등으로 불렀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을 보면, 당시의 음식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속 장면에서는 주모가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밥은 이미 제공되었고, 추가로 술을 따르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앞쪽에 놓인 항아리는 술독으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는 중이다. 이처럼 음식은 이동 중인 이들을 위한 일종의 ‘패스트푸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배경으로 보이는 지역은 무악재로 추정되며, 도로가 확장되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무악재 앞에는 영천시장이 있었는데, 떡, 두부, 국밥 등으로 유명했다. 특히 두부는 서대문형무소와 연관된 음식으로, 죄를 씻는다

는 상징성을 지닌 순백의 음식이자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영천시장은 북쪽 지역인 개성, 평양, 나아가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 중 먹을 수 있는 떡과 같은 음식들이 자주 판매되었다. 함지에 떡을 담아 길가에 서 파는 여성들(‘떡모’, ‘병모’)의 모습은 당시의 대표적인 거리 풍경 중 하나였다.

국밥은 시장에 모여든 장꾼들을 위한 대표적인 음식이었다.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과 이동은 곧 연료의 문제와도 직결되었다. 나무 외에도 석탄, 연탄, 가스 등 압축된 연료가 등장하면서 열의 저장과 이동이 가능해졌고, 내연기관과의 결합으로 물류 효율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나무가 주요 연료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서울 음식의 지역성—해장국과 부대찌개를 중심으로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국가로서 살생을 금지하고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경운기 역할을 하는 소를 도축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동시에 조선 왕조는 유교 국가로서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소고기는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였다. 따라서 ‘소를 잡지 말라’는 법령과 ‘제사에 소고기를 바쳐야 한다’는 문화가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백성들은 소를 잡은 죄를 지었더라도 속전이라는 벌금을 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고, 속전은 국가의 수익이 되었다.

도축 후 발생한 부산물은 서민의 음식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소의 내장과 뼈는 해장국의 주재료가 되었고, 이로부터 곱탕, 설렁탕, 해장국 등이 형성되었다. 현대에는 이들 음식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과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뼈 국물을 사용했고, 선지와 된장을 첨가하면 해장국이 되었다.

설렁탕과 소머리곱탕이 분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당시 외식 산업에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대중화된 설렁탕과 차별화된 ‘소머리곱탕’이 등장했다. 곱탕, 해장국, 설렁탕 등은 모두 서울의 역사적 제도와 식문화, 유통구조, 이익 네트워크가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해장국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가 청진동 해장국 골목이었다. 해장국은 단지 ‘술을 해장하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장터를 오가던 보부상, 이동 중인 장인과 상인, 밤새 유흥을 즐긴 이들,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첫차를 기다리며 해장국집을 찾는 이들까지 모두 해장국 문화의 일부였다.

또한, 해장국집에 들어갈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저렴한 거리 음식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순두부 구루마’였다. 이는 순두부를 밤새 쭈어 손수레에 담아 새벽 극장 앞에서 판매하던 방식으로, 미원과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을 넣어 즉석에서 한 국자씩 퍼주었다. 가격은 해장국보다 훨씬 저렴했으며, 새벽까지 거리를 배회하던 청소년들과 극장 관객들의 공복을 채워주었다.

부대찌개는 흔히 ‘아미 스투Army Stew’로 번역되며, 그 탄생은 6·25 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종종 ‘꿀꿀이죽’과 혼동되기도 하나, 부대찌개는 그보다 정제된 기원을 가진 음식이다. 꿀꿀이죽은 실제로 존재했던 음식으로, 미군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드럼통에 담아 남대문, 동대문, 군산, 부산 등지에서 판매한 사례가 있다. 반면, 부대찌개의 초기 형태는 보다 조직화된 경로를 거쳤다. 미군 부대 취사장에서 남은 냉동 식자재를 재냉동할 수 없어 버리게 되었고, 이를 군속(軍屬) 요리 보조원들이 “가져가도 되겠냐”는 식으로 얻어 외부 식당에 넘긴 것이 시초였다. 이는 잔반이 아닌 정식 식자재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꿀꿀이죽과 구분된다. 시간이 흐르며 이런 반출이 통제되자, 일부는 미군과 동거 중이던 이들이나 민간인을 통해 식자재를 합법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지역별로 부대찌개는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다. 동두천식 부대찌개는 김치찌개를 기본으로 멸치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문산·과주 지역에서는 대파를 많이 넣고 비교적 담백하게 끓인다. 오산과 송탄의 공군 기지 인근은 장교와 간부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급 식재료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치즈가 들어간 ‘송탄식 부대찌개’가 탄생했다. 가장 ‘럭셔리한’ 형태는 서울 이태원 미 8군 인근에서 발전한 ‘이태원식’으로, 당시 고암식당(코리아-아메리카의 줄임말)이 유명세를 떨쳤다.

부대찌개는 그렇다면 슬픈 음식인가. 사람들에게겐 ‘더러운 음식’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반대로 문화 접변의 산물로 관대하게 이해될 수도 있다. 다만 음식의 탄생을 둘러싼 미군의 주둔, 그리고 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된 역사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흡수되고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호남 음식의 변천

호남 지역은 한국 음식 문화의 보고로 여겨져 왔다. 전통적으로 호남 음식은 ‘천연 다시다’라 불릴 정도로 다채로운 것갈을 활용하여 깊은 맛을 낸다. 이는 전라도 일대에 발달한 갯벌 지형과 강의 유기물 퇴적 작용, 얇은 해안선 등 자

연환경의 혜택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지역 음식의 정점은 19세기 말 미국 외교관 조지 포크(한국명 복구)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접대받으며 12첩 반상의 정찬을 경험했고, 이를 영어로 상세히 기록했다. 이 기록은 감영 접대 음식의 드문 사료로, 당대 호남의 음식 수준과 다양성을 증언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 호남 음식은 지역 내부에서조차 점차 ‘화석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광주 시내 한 식당에서조차 ‘전라도식 백반’을 따로 표기하여 홍보하는 현실은, 전통 음식이 더 이상 지역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관광객 중심의 음식 시장이 형성되며 지역민의 음식 문화를 오히려 왜곡하거나 소멸시키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경쟁과 균질화의 압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느 중국집에서 다섯 종류의 김치를 내놓으면 인근 한식당은 그 이상의 반찬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는 음식의 진정성과 지역성보다 소비자 기대치와 상업성이 우선시되는 구조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지역 음식의 고유한 풍미와 조리 방식은 점차 사라지며, ‘한정식’처럼 본래 없던 개념이 전통 음식처럼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음식의 지역성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실향민과 냉면을 중심으로

6·25 전쟁 이후 실향민 약 150만~25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기독교 신자,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되기 어려운 신분층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과 경부선 라인 도시에 정착했다. 특히 서울에는 북쪽 혈통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향민 밀집도가 높았다.

이들은 대부분 맨몸으로 내려왔기에 생계를 위해 봉제, 포목, 음식 장사 등에 종사했다. 평안도·함경도 출신들이 많은 창신동과 동대문 시장 일대에는 북쪽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북에서 익숙했던 음식 문화가 서울에서 새롭게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냉면’이다.

냉면은 본래 북방의 음식이었으나, 실향민들이 임시정부의 피난 이동선을 따라 남하하면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퍼져나갔다. 호남 지역에는 냉면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북 출신들은 면 단위, 심지어 리 단위로 장학회를 만들 정도로 뿔뿔 뿔뿔 뿔뿔 살았는데, ‘부원면옥’ 같은

상호는 이처럼 고향 지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드러낸 대표적 예다.

특히 서울 종로5가, 오장동 일대에는 실향민들의 지역 정체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냉면집들이 밀집해 있다. 함경도 출신은 함흥냉면을, 평안도 출신은 평양냉면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개업했고, 그 지역의 거주민 구성에 따라 상권과 메뉴 특성도 달라졌다. 이러한 실향민 냉면집은 단순히 고향의 향수를 재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터전에서 음식의 지역성과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공간이었다. 밀면처럼 실향민의 식문화가 남쪽의 재료와 현실 속에서 재해석되어 새로운 지역 음식으로 탄생한 경우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쟁과 이주의 역사는 음식사를 만든다

전쟁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그로 인한 강제 이주는 지역 음식 문화를 탄생시키고 변형시켜왔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전쟁 이후의 ‘보트 피플’이다. 1975년 월남(남베트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체제와 맞지 않는 정치적 반대자, 종교인, 화교들이 대규모로 탈출했다. 이들은 주로 미국, 호주, 프랑스 등으로 흩어졌다. 프랑스는 약 10만 명의 이주민을 수용했고, 그들은 현지에서 쌀국수나 베트남식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도시의 쌀국수가 본국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현지의 풍부한 재료와 전통적인 조리법이 결합한 결과다. 쌀국수는 특히 남베트남 출신 이주민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허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남부식 쌀국수가 주류를 이룬다. 반면 북부 베트남의 쌀국수는 고수나 허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맛의 계보가 다르다.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에 쓰이는 바게트는 비교적 부드럽다. 쌀을 섞어 빵을 굽는 데다 습한 기후 때문에 빵이 물러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식은 단일 민족국가의 정체성 안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주와 분단, 그리고 정치적 갈등 속에서 생성된 정체성의 결과다.

한국의 화교 음식도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중국의 마적 때나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입국한 화교들은 봉제 기술이 없으면 대개 음식 장사를 택했다. 그들은 짜장면, 유니짜장, 호떡 등의 음식 문화를 퍼뜨렸으며, 인천이나 목포 등 항구도시에서 중국 음식의 지역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목포의 간짜장은 ‘중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화교 음식 문화의 독자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속초나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까바리’라 불린 명태·오징어잡이 배에서 일하던 어부들이 여름철 찬밥과 갓 잡은 오징어를 버무려 급히 나눠 먹었던 것에서 물회가 탄생했다. 또한 인천의 경우, 해장국과 설렁탕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단순한 음식 취향의 결과가 아니었다. 조선 후기 개항 이후 돈이 물리던 미두취 인소(쌀 선물 거래소)와 항만 노동, 유흥문화가 발달했다는 토양이 있었다. 국밥은 빠르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에 노동자와 도박꾼,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식사였으며, 이로 인해 인천의 해장국 문화가 꽃을 피웠다.

이렇듯 전쟁, 분단, 이주, 사회적 변동은 단순히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음식은 살아 있는 역사이며, 국가의 경계와 민족 정체성 너머에서 생성되고 진화하는 문화적 증거이기도 하다.

6강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치학, 문화인류학, 과학기술학을 공부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경남 거제도 조선소에서 5년간 일한 이후 15년째 경남과 서울을 오가며, 산업도시와 제조업, 엔지니어와 지역 청년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오월의 봄, 2019)와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부키, 2024)를 썼고, 2020년 한국출판문화상과 한국사회학회 학술상(저술분야)을 수상했다.

이 원고는 양승훈,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부키, 2024); 양승훈,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 사회』 2021년 가을호(131호), 10~54; 양승훈, “지방 청년 이야기하기: 주체 설정, 구조의 변동과 딜레마”, 한국사회학회 2023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을 기초로 축약해 작성했습니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https://youtu.be/Mkv1jK7xfhc>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지방 청년이 어떻길래?: 지방 청년에 대해 말하는 방식

지난 수년간 지방 청년은 문제적 존재로 대두됐다. 기존에도 이른바 ‘지잡대’로 호명되는 지방대생에 대한 온갖 설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취업에서의 차별, 저임금 일자리, 지방대 출신으로 생활하면서의 경험 등. 오프라인의 통념, 온라인 담론이 결합한 형태의 설화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제정임·곽영신 편, 2021). 지방 청년이 문제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학계의 관심과 정치적 기획 모두가 얽혀 있다.

사회학 연구는 ‘복학왕의 사회학’을 발굴하던 시기부터 지방 청년을 본격적으로 담아냈다(최종렬, 2018). 특정 지역 대학생의 고유한(혹은 이상한) 습속을 살펴본 문화연구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지역 문화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고, 이미 문화연구와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 1990년대부터 ‘히트 상품’이었던 청년 세대론(신세대, 88만원 세대, N포세대, MZ세대)과 포개어 ‘지방 청년’이라는 문제 설정을 만들어 냈다(양승훈, 2021). 다른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대의로 삼는 정치세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제조업 구조조정과 산업도시의 쇠락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지방 청년을 주요한 주체로서 등장시키기 시작했다(양승훈 2019).

지방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보면 각 해석이 발화할 때 만들어 내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희생자·생존자다. 이런 해석은 통계적인 위치로서 지방 청년을 위치시킨다. 지방 청년들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서 열위에 있는 지방대를 다닌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노동시장에서 열위에 서서 저임금·비정규직·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을 하는 존재들이다. 다른 한편 메트로폴리스 서울·수도권의 ‘도시의 자유’에서 배제되었고, 가부장적인 지방 문화 속에서 고립되고 착취당해 신음하는 존재들이 된다.

두 번째는 겸연쩍은 주체다. “복학왕의 사회학”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하는 주체나 공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수도권의 주체성’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가치로 두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고 살겠다는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성찰적 겸연쩍음’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소심한 지방 청년들을 각성하기 위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원 진학이나 전국 단위 학술행사 참여, 혹은 해외 답사 등을 대안으로 내놓게 된다(최종렬, 2018).

마지막 세 번째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아방가르드와 일꾼이다. 우선은 아방가르드를 상징할 수 있다. 지역에는 ‘대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류석진·조희정·정현미, 2021; 기화서·이미나·손애숙·손진

수, 2022; 배문규·최민지, 2022). 예컨대 산업도시 거제에서 대안적 관광과 전시, 그리고 로컬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여성 기획자 집단인 ‘거제 로컬 디자인 섬도’ 팀을 들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지역 문화에 대한 대안적 해설도 이러한 능동적 주체 해석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1970~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해석을 해낼 수 있다. 마산 오동동창동을 누비며 “입어서 (월급을) 없애는” 소비의 주체이자 데이트를 하고 야유회를 하며 그 에너지로 1980년대 마창노련(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맹)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변혁 운동을 조직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을 지방 청년의 모습으로 재발굴하는 것이다(양승훈, 2023). 이러한 견지에서 숨어 있는 지역의 아방가르드를 찾거나 유치하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로컬 콘텐츠’ 사업이나, 대안 운동을 발굴하려는 연구의 시도 모두가 능동적인 주체를 찾으려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 청년에 대한 해석들 모두는 해석하는 연구자의 의도, 특정한 실천을 견인하려는 정치적 담론의 방향성 측면에서 복잡한 딜레마를 만들어 낸다. 먼저 희생자·생존자 서사로 지방 청년을 해석할 경우, 떠나려는 청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선구자로 봐야 할 것인가, 배신자로 봐야 할 것인가? 사실 이탈자를 배신자로 해석하는 시선은, 중앙/지방 정부와 지방소멸의 관점을 살핀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중앙정부 관점에서 여성 청년의 상경이나 광역 내 대도시로의 이주는 그 자체로 저출산을 강화하는 시도가 된다. 지방정부 관점에서도 여성 청년의 이탈은 지방소멸 그 자체가 된다. 지방소멸 지수는 지역의 ‘가임기’ 여성청년이 얼마나 고령자를 돌볼 수 있느냐를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활기찬 비전을 내세우며 “상황을 완화시킬 테니 지역에 살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뿌리내려 살라”는 은연중의 전제는 지역 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 관점에서 이러한 시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넌덜머리’를 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 청년을 껌연적 주체로 해석할 경우, 해법은 ‘지방의 코스모폴리탄 계몽 프로젝트’가 된다. 앞서 희생자·생존자 해석이 일종의 ‘인프라 관점의 대안’을 추구한다면, 껌연적 주체 해석은 대안으로서 ‘학습 프로젝트’를 추구하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 청년들을 ‘무지한’ 주체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은 지역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체화되었기에 껌연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인가? 실천적 의미에서 살펴볼 때도 딜레마는 지속된다. 지역 문화 안에 갇히지 않고 껌연적 주체loyalty가 ‘꺾뎀기를 벗고서’ 나왔을 때 향하게 될 곳은 ‘어디’인가? 목소리voice를 내는 지역 사회의 혁신을 위한 시민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 구속

에서 벗어나기exit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향할 것인가(허시먼, 2016)?

마지막으로 지방 청년을 능동적인 주체로 해석할 경우, 누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냐의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일단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대안적인 문화 운동을 하는 아방가르드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것과, 지역사地域史 관점에서 다수 평범한 청년들의 대중문화를 발굴하는 것은 다르다. 아방가르드를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발굴하는 것은 다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질적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고 그저 통계로서만 존재하는 다수 지방 청년들의 문화와의 관계를 충분히 탐색하지 않는다면, ‘청년몰’, ‘메이커 스페이스’, ‘지역 혁신’ 프로젝트의 확장과 특별한 변별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능동적이고 대안을 만들었던 주체를 롤모델로 삼는 전략 역시, 당대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회구조에 대한 탐색이 빠진다면, 그저 지방 정부가 타지역을 ‘벤치마킹’하는 지역사 만들기로 포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선 3가지의 관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수도권의 청년들과는 다른 어떠한 위치, 역량, 활동에 대한 가정을 가지는 게 문제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 살펴볼 경우 우리는 지방 청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봉착한 노동시장의 문제와 지역의 불균등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방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즉 일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보편적인 지방 청년들의 일경험

우리가 지방 청년들의 일경험을 앞서 제시된 필터들을 통해 오해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표준취업경로’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표준취업경로는 거칠게 말해 시험을 통해 입사하는 직장과 그 이후 이어지는 커리어 패스career-path를 의미한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고, GSAT 등의 인적성시험을 봐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NCS 문제집을 공부해 공기업에 취업하는 일자리들이 표준취업경로의 전형적인 예시다.

그런데 표준취업경로 가정은 청년 노동을 대표하지 못한다. 표준경로 안에 위치한 공채나 국가고시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는 10~15% 이내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나 지방거점국립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을 합친 숫자(30%)의 절반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85~90%의 인구는 표준취업경로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10~15%에 해당하는, ‘선망 직장’(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원)에 진입하는 구직자를 제외하면, 85~90%의 청년들은 ‘그 외’로 분류

되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근무하게 되거나,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게 된다. 주류 미디어와 정책의 언어가 절대다수의 노동을 '이례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공장경험과 제조업 도시를 떠나는 남성 청년들

동남권 산업도시들은 조선(울산·거제), 석유화학(울산), 자동차(울산), 종합기계 및 방위산업(창원), 항공(사천), 철강(울산, 포항)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들은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왔고, 산업도시들을 '노동자 도시'라고 불렀던 것도 같은 이유다(양승훈, 2019).

2020년 코로나19 창궐 전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남학생들이 방학할 때마다, 그리고 입대 전 시간이 남았을 때, 또 입대 후 시간이 남았을 경우 등을 정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에 최대 300만 원 남짓을 두 달 벌면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 부모들은 남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 본인들에게도 공장이 익숙하고, 주변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학생들이 공장을 더 선호하는 것은, 학교의 근로장학생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80만 원+α 수준보다 공장의 급여가 더 높기 때문이다. 지역 공장들에는 월 150~300만 원까지 다양한 월급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절대다수가 남학생들에게 주어진다.

학생들에게 일터는 배움터이기도 하다. 실제 본인들의 진로를 설계할 때 자신들의 준거점이 자신들의 일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보이는 조직이 사회에 대한 상을 반영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선배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상을 반영한다.

중공업 공장에는 산재가 흔하다. 조선소 같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사망을 포함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난다. 그 외의 작업장도 언제든 사소한 경상부터 중대재해까지 모든 종류의 산업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학생들은 산재 자체가 주는 충격보다 지역의 공장들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때문에 충격을 받곤 한다. 산재가 벌어지면 대기업 원청 노동자가 아닌 이상 공상(사고 후 초기 치료비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편으로는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어수룩하게 넘어갔기 때문이고,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본인들의 경험칙 때문에 구태여 4대 보험을 들어 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러 갔을 때는 잔업과 특근이 많아 많은 벌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장일이 직업이 되면 오히려 임금은 줄어들기 일쑤다. 연봉으로 소급되어 임금이 정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 공장은 드물지 않다. 동시에 그럭저럭 괜찮은 하청업체 일자리를 발견해서 정규직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게 될 때, 그런 자리는 대개 업주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좀 큰 공장을 갈 경우 노동조합의 ‘방패’ 안에 있는 정규직들의 노동 윤리는 천차만별이고, 많은 경우 힘들고 위험한 공정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본인들은 간접직을 맡거나 작업 세팅만 해놓고 장기 두고 노는 등 ‘태만하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생 남성 대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일터의 조직구조와 행위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남학생들이 공장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기계’이기도 하다. 수동 공작기계는 혼자서 2대를 담당할 수 있지만, 자동 공작기계(CNC 공작기계,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는 3명이 20대가 넘는 기계를 담당해서 공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공장경험을 통해서 생산직 일자리의 미래를 다시금 비관적으로 아로새기게 된다.

방학마다, 군 입대 전후 휴학 시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경험을 누적해 온 학생들은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같은 시간 이러한 일자리를 본인들의 일자리 구상과 점점 더 단절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공장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청년들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게다가 비슷한 임금에 유연한 근로를 보장하는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노동은 이들에게 구태여 지역의 제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게 만든다.

고학년이 되고 남학생들의 일경험과 진로 설계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시점, 부모들이 ‘등판’하기 시작한다. 1980~1990년대 대규모로 대기업에 입사하여 창원이나 거제, 울산의 중산층을 형성했던 노동자 아빠와 전업주부 엄마. 갈팡질팡하는 자녀와 부모가 잠정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은 결국 공무원 시험, 공기업 시험 등 입사시험이다. 앞서 언급했던 ‘표준취업경로’에 도전하는 계획이다. 공장 일경험을 하고, 몇 년을 버티면서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2~3년 정도의 시험 준비 후 포기하고 학교의 취업지원팀이나 지역의 취업지원센터, 온라인을 활용해 중소기업으로 입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 이상 전망직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도전이 가능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현실파악’)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지역을 떠나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리 잡게 되는 선택을 한다. “떠날 것인

가, 남을 것인가”라는 선택지 중에 우세한 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취하는 ‘성찰적 겸연쩍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Hirschman, 1970; 최종렬, 2019).

산업 가부장제와 여학생들의 일자리

청년 여성의 일자리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보려 한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커리어’다. 예컨대 경력이 쌓이거나 역량과 성과가 더 쌓일 때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자리.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화이트 칼라이거나, 의사·변호사·약사 등 면허 등을 통해서 보장 받는 전문직 등을 뜻한다. 여성 커리어 잡의 반례로는 ‘핑크 칼라’를 들 수 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 노동시장의 수요가 늘 있긴 하나 마찬가지로 공급도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이직을 하거나 복직을 했을 때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여성들의 직종을 뜻한다. 비수도권 지방 도시에서는 ‘여성 커리어’의 확보가 어렵다. 임금 노동에서 여성의 몫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가 드물고,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의 임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문제시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은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로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한편에서 보자면, 산업도시는 외벌이로 한부모 가정을 이끄는 여성에게 최악의 거주지가 된다.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산업도시는 이미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타지역의 여성이 파트너를 따라 진입하는 순간 경력이 봉쇄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나 가풍의 문제, 가족 내 문화만의 영향보다는 산업구조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남자 대학생들이 공장에서 200~3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마다 할 때 여학생은 같은 시간 편의점, 식당, 프랜차이즈 화장품 판매 등을 담당하며 100만 원을 번다. 공장에서 CNC 공작기계를 다루면 기계 다루는 숙련이라도 늘고 심지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력서 한 줄은 되지만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여학생들은 저숙련 서비스업 일자리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노동시장 진출 시 여성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사무직과 전문직이다. 우선 사무직을 생각해 보자. 예컨대 공채를 통과해 대기업,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것

이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현재의 선호를 고려한다면 제조대기업도 있지만, CJ엔터테인먼트, 현대카드, 신세계 등 미디어, 금융, 유통, 무역, 항공 등 분야의 대기업들인 경우가 더 많다. 직무로 봐도 홍보, 마케팅, 인사, 교육 등의 직무일 때가 많다. 많은 광역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산업 유치와 창출의 목적 안에는 여성 고용을 제고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기도 하다.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유치할 때도 고려되는 사항이다. 물론 공공부문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더라도 여학생들의 취업 자체가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산업도시에는 사무직 여성 일자리가 많이 있다. 비서나 사무보조직이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사람이나 인크루트 같은 취업 사이트에서 '대기업 사무직 여직원 모집'에 응시하면 간단한 면접 절차를 통해 채용이 된다.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뽑히면, 처음에는 인력 회사 파견으로 입사하게 된다. 그러다가 2년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청의 계약직 사무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보통 일선 부서의 '서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무보조직을 수행하거나 임원실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무보조직이나 비서직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유연성의 도구로 전략할 때가 많다. 일단 결혼을 하거나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될 때 퇴사하는 경우다. 아직 정규직이 되지 못한 경우,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전환에 실패하게 된다.

비수도권 산업도시 여성들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직 일자리가 희소하고, 사무직이라고 알려져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 사무보조직 일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선택지를 택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의 경영 관련 전문직, 손해사정사나 보험계리사 등의 보험 관련 전문직, 그 외 의사, 간호사, 교수나 연구원, 교사 등 전문직이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여성 전문직 일자리가 저임금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자체가 영세해서 많은 전문직들을 고용하지 않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전문가들은 많은 셈이다. 그리고 대개 여성 전문직의 일자리는 주로 임금이 가장 낮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된다. 어린이집 교사나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전문직 일자리, 즉 핑크 칼라 일자리는 사무보조직 일자리보다도 임금이 적게 되는 역설에 빠진다.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벌어진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 즉 재취업을 하기에는 초중고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몇 개의 전문직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중고 교사를 제외한 영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업들은 임금을 많이 벌기 어렵

다. 또한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커리어 패스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 혹은 '여성직'이라는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적절한 일자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 자라 대학을 나온 여성이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근속을 올리고 경력을 인정받아 이직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불충분하다. 다른 한편에서 전문직 여성이 비수도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의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산업도시의 주력산업이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선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의 성비는 97:3이다. 즉 남성이 97%, 여성이 3%다. 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의 성비는 94.4:5.6이다. 석유화학 단지의 롯데케미칼 성비는 88:12이다. 정유업체 SK에너지의 성비는 94:6이다. S-OIL도 94:6. 산업과 상관없이 큰 차이가 없는 성비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현대중공업 공장 등의 성비는 앞선 수치보다 더 남초가 두드러진다. 달리 말하자면, 산업도시 주력산업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숫자만 놓고 보면 도시 자체가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차별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 딸들의 고용에 대한 질문이다. 고학력 화이트칼라로 만들기 위해 블루칼라 생산직 가정에서 아들딸 가리지 않고 공부를 많이 시켰다. 2000년대가 되면 대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동수가 되거나 여학생의 비율이 역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과대학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수직상승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기계공학과에서도 여학생의 비중이 30%를 넘는 학교들도 많다. 남성과 동등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동시에 가사분담도 균등하게 하고, 아이도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배운 세대가 노동시장의 진입을 꿈꾸고 있다. 딸들은 아들들과 똑같은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산업도시들이 똑같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나? 질문은 고학력 청년들이 바라는 사무직과 전문직 일자리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산업도시가 갖고 있는 공간 분업에서의 위상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도시들의 여성 일자리 상황은 열악하다. 산업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들은 그나마 '사무 보조직' 일자리도 드물다. 지방의 여성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딸들 눈에 비치는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아질 수 없다. 엄마들은 딸들에게 끊임없이 공무원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청하고, 딸들은 기회만 있다면 지역을 떠나려 한다.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가사노동, 육아, 일에 대한 지역 사회와 가족들의 가치 부여는 점차 전국과 유사하게 재편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이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커리어 우먼’의 생각이 커져가는 속도를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가 맞춰주지 못한다면, 비수도권 젊은 여성들의 유출은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남편 벌이’에 의존하여 집안을 살피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더 가치 부여를 하는 여성들만 지역에 남거나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대다수 도시와 산업은 지역 청년들의 고학력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을 전혀 구축하지 못했다. 고학력화에 이어 예상되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고유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고 싶은 젊은 고학력 여성들은 지역을 떠나려고 한다. 지역에 남아 삶을 영위하고 싶은 여성들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비교적 높은 출산율로 그들 가정의 존재를 보여주지만, 여성을 선두로 하는 청년세대의 유출 속에서 다음 세대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이다.

결국 지방 청년의 문제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는 한 지방 청년들의 경쟁의 위험을 감수한 ‘탈출’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해법 역시도 ‘먹고 살기’에 집중하면서부터가 출발이다.

참고문헌

- 레슬리 칸.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황가한 옮김. 열린책들. 2022. 80
- 앨버트 O. 허시먼(Albert O. Hirschman). 2016.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강명구 옮김. 나무연필
- 양승훈. 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오월의 봄
- 양승훈. 2021.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청년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사회』 131: 10~54
- 양승훈. 2022. “산업도시의 정상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와 공간분업”. 『문화과학』 112: 125~143
- 양승훈. 2023. “창원시 노동사 기초 자료 조사 및 구술 채록”. 창원시. (비간행)
- 제정임·곽영신 편. 2021.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오월의봄
- 최종렬. 2018. 『복학왕의 사회학』. 오월의봄
- 클라우디아 골딘. 2001. 『커리어 그리고 가정』. 김승진 옮김. 생각의 힘. 2021



이정우



조류영

7강

서울 공화국이나 균형발전이나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1950년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강연 보기 유튜브 @doosanartcenter

강연 듣기 팟빵 두산아트센터

두 사람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천주교 박해로 장기간 전남 강진에 귀양을 가 있을 때 아버지로 인해 벼슬길이 막혀버린 아들에게 보낸 편지(1810년 초가을)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은 시골에 숨어서 살게 하였지만, 앞으로는 오직 서울의 10리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 만약 집안의 힘이 쇠락하여 서울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 잠시 서울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어 생활을 유지하다가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바로 서울 복판으로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백 년이 흐른 뒤 1923년 1월 〈개벽〉 잡지에 고당 조만식(古堂 曹晩植) 선생은 이렇게 썼다.

“형제여, 당신들이 나고 자란 곳은 나날이 쓸쓸해집니다. 당신들이 지금 있는 곳은 서울입니까? 거기만 모여서 웅성거리지 마오.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대도시에 있습니까? 공연히 왔다 갔다 하지들 마오. 제 각기 자신의 향토를 지키기로 합시다. 죽기까지 지켜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의 선각자—다산 정약용과 고당 조만식—의 서울, 지방을 보는 관점이 정반대라서 흥미롭다. 당신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서울 공화국

한국은 수도권 집중이 기형적으로 심한 나라다. 유럽 대도시의 인구는 대개 100만 명 미만인 데 반해, 우리의 경우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에다가 인근 경기도까지 합하면 2,500만 명을 넘어서서 즉,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에 사람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서울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면적으로 보아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중앙부처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80%, 100대 대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의 70% 이상이 몰려 있고, 금융거래 비중도 수도권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흔히 일본을 도쿄 1극집중체제의 국가라고 비판하지만 한국이야말로 서울 1극집중체제를 구축해왔고 그 집중의 정도는 일본을 능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다.

과밀의 수도권과는 상반되게 지방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사枯死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에도 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이 더러 있지만 그나마 오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머지않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들이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서울로 옮기는 이유로는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달성한 기업의 경우 지방의 세무당국이나 기타 관청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다. 같은 기업이 서울로 옮겨가면 자기를 능가하는 기업이 워낙 많으니 기업의 숲속에 숨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에서 성공을 거두는 기업 중에도 얼마 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최고는 대부분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절반의 인구는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지방 소도시에 살든 대도시에 살든 관계없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류 시민 같은 자조감을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 절반인 지방 거주 국민을 이류 시민처럼 치부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이것이 한국과 외국 선진국과의 큰 차이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 ‘지방대학’이란 표현도 아주 이상한 말이다. 지방대학 교수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에 비해 다소 열등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외국에는 이런 말이 없다. 세계 일류 대학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MIT, 프린스턴, 예일, 시카고대, UC 버클리는 모두 지방에 있는데도 그들은 지방대학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사실 좋은 대학은 조용한 시골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은 번잡한 대도시의 교통지옥에 시달리며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한가한 시골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전국 20대 명문대 중 17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중앙일보 대학평가).

도시 적정 규모는?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71년 조순 교수의 후진국 경제개발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과목의 교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경 받는 경제학자 아서 루이스

Arthur W. Lewis의 『경제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ning』이란 책이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최적의 도시 규모는 인구 50만 명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최근에 와서는 거대도시가 갖는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도 등장하고 있어서 루이스의 50만 명설은 타당성을 잃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의 중소도시라면 그 생활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여유가 있을까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이런 작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부딪히며 겪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을 것이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정도 규모의 살기 좋은 도시가 적잖이 존재한다. 최적의 도시 규모가 인구 몇 명인가 하는 문제는 딱 정답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과밀 현상은 도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 전 내가 서울에 살 때는 ‘금요일 오후에는 강남에 가지마라’는 말이 있었다. 교통 체증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요일이나 강북, 강남에 관계없이 항상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 여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도시 규모의 집적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 역의 마이너스 효과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능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 체증, 스트레스, 환경 악화 등 과잉 집적의 비용은 엄청나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귀중한 자원을 압도적 비율로 모아 놓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예상 못한 위험을 가산할 때 국가적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인류 고금의 지혜가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만큼 수도에 인구가 집중된 나라는 없다.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하기로 유명한 일본도 도쿄의 집중률이 30% 정도이고, 유럽 중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하도 심해서 ‘파리와 그 밖의 프랑스의 사막Paris and the French Desert’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파리권의 인구는 20% 미만에 불과해서 50%에 달하는 서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집중의 역사적 뿌리

서울 집중이 1960년대 공업화 과정 이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하는 지방 청소년들의 행렬에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극심한 서울 집중은 결코 그때부터 생긴 일이 아니다. 실제 이 현상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의 명저 『한국: 소용돌이의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1968)를 보면 서울 집중은 이미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 꾸준히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현상이다. 서울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모든 것을 흡인하고 있었고 지방은 공백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1894년에 우리 땅에 첫발을 디딘 이래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Korea and Her Neighbors*(1897)라는 흥미 있는 여행기를 남겼는데, 이 책에는 서울 집중의 폐해가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비숍은 지방 관아를 세 군데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곳에서도 고을 수령을 만날 수 없었고 어디 가셨는지 물어보니 똑같이 서울 가셨다는 대답을 얻었다. 수령이 서울에 가는 이유는 공무상의 출장이 아니고 권세 있는 세력가에 잘 보여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기 위함이다. 비숍 여사가 관찰한 시골 관청은 청소조차 제대로 안 해서 누추하기 짝이 없는데, 관리들은 피뢰죄한 몰골에 장죽을 입에 물고 하루 종일 노름에 몰두해 있었고,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 알리는 북을 치는 게 고작이었다. 지방 수령들은 백성들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서울의 권세가에 아부하여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심지어 어떤 자는 부임 초 한번 내려와 취임 축하 잔치를 벌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한 뒤 다시는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다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외국의 성공 사례

그로부터 100년 뒤 지금의 지방 정부를 생각하면 비숍 여사의 관찰은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있으나 다만 서울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비숍 여사는 쓰고 있는데, 현재 매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해오는 인구의 순증가분이 20만 명 수준이니 지난 100년간 서울 집중이 얼마나 가속화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방 후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대 정부는 항상 말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표방하였으나 진심과 열성은 턱없이 부족했고, 따라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울 집중은 날로 심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분권과 균형을 위한 정책이 더러더러 있었으나 서울 집중은 날로 악화일로를 걸어 오늘 보는 극심한 불균형에 이른 것이다. 역대 정부의 분권, 분산 대책은 구두선에 불과했고 진정으로 효과 있는 대책은 제시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현재의 상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해야 하

는데 분산과 균형은 이미 시장의 힘으로 달성하기는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지역 혁신 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구축을 통한 성공 사례를 여러 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키스타 Kista 지역에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서 있다. IT와 관련된 산업·연구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사이언스 파크에는 에릭슨을 포함하여 IBM, 노키아, 모토로라, 인텔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입주하여 IT 강국 스웨덴을 이끌었다. 1990년대 초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스웨덴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데는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지방분권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테크노 폴 메즈, 일본 도쿄의 오타구 지역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혁신 체제의 개발 성공 사례는 많다.

외국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점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가 혁신 클러스터 형성의 주도권을 쥐려고 해서는 안 되며, 민간에 주도권을 주되 다만 클러스터 형성과 혁신과정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모으고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주는 ‘축매자’ 내지 ‘중매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은 없으므로 ‘사막 위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헛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 하이테크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이나 전통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혁신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 넷째, 지나치게 응용기술 편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

참여정부의 경험과 교훈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실패했던 분권과 분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거의 유일한 정부라고 말해도 좋다. 참여정부는 분권, 분산을 통해 지역 간 형평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도 높이는 즉, 효율과 형평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는 균형발전 3대 입법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였다. 3대 입법은 2003년 말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됨으로써 드디어 수백 년래 우리나라의 숙원을 푸는 역사적 대장정이 시작됐다. 한 가지 아쉬

운 것은 이 중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2004년 가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제동이 걸린 점이다. 그리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차선책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176개의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해방 후 역대 정부 최대의 균형발전 성과였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특징은 지역 혁신 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의 구축을 들고 나온 점이다. 지역 혁신 체제는 ①특정 지역에서 ②특정 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③개별 혁신 주체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공동 학습, 정보와 성과의 교류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④제반 제도와 환경, 지배구조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혁신 체제는 크게 산업 클러스터와 지역 혁신 인프라, 지역 지배구조의 3요소로 구성된다. 산업 클러스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집적, 연계된 산업군으로서 지역 혁신 체제 형성의 거점 역할을 한다.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에 골고루 분산 배치한 이유는 그곳이 지역 혁신 체제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전 기관의 숫자가 적고, 주변 산업, 대학과 연계가 약하여 소기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무리한 평등주의 정책으로 간주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목표한 바는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분산 정책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자립적 지방화였다. 참여정부는 첫 삽을 뜬 공로를 세웠으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지역 혁신 체제의 구축은 제도와 체제를 바꾸는 일이고, 의식과 문화를 혁신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의 지배구조를 혁신 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은 오래된 기득권 세력이 향토의 권력구조에 안주하면서 지역 혁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역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배분, 집행, 평가 체계가 갖추어지고, 지역 혁신 체제 내의 다양한 주체별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여 여러 지역이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기업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25개 성별로 독자적 발전모델을 추진하여 한 군데에서 성공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통해 장기간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음은 참고할 만하다. 지역 혁신 클러스터 형성에서 기업, 기술, 시장에만 주력해서는 안 되고,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인프라의 바탕 없는 지역 혁신

체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라는 반갑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므로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 등 부동산 투기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자. 한국은 수도권 집중이 유독 심한 나라다. 일본이 도쿄 ‘1극집중국가’로 악명 높고, 프랑스는 ‘파리와 기타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조롱을 받지만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 프랑스보다 더 심하다. 서울 집중의 폐해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 서울은 인구과밀, 교통 체증, 주택 문제, 환경 악화, 지나친 경쟁 등 온갖 문제점이 인내의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그 반면, 지방은 서서히 말라 죽고 지방대학은 폐교 일보 직전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작년 국민의힘에서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발상을 꺼냈다. 이것은 주민들 표를 얻자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면 경기도, 아니 광주, 대구를 서울에 편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전국을 서울에 편입하고, 서울 공화국으로 개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옳은 방향은 서울 집중을 차단하고, 지방을 고루 발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첫째,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참여정부에서 달성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사상 최초의 성공적 대역사였으나 후속 조치가 따르지 못해 전국의 혁신도시는 미완성이다. 각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에는 입주 기관 숫자가 적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혁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중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역산업, 지방대학과의 연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이전 공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리하면 쇠락한 지방을 살리고 과밀한 수도권에는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방 혁신도시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방대학 혁신과 산학연 협력: 전국에 산재한 210개의 지방대학은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문화자산이자 미래 발전을 위한 교두보이다. 그러나 지금 폐교 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이 많아서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4년제 및 2년제 지방대 중 우수한 글로벌 대학을 40개 정도 선발하여 집중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우수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도 포함되며, 단독 대학뿐 아니라 여러 대학의 연합모델도 가능하다.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ODA 자금을 적극 활용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이들 대학에 유치하는 방안이 있다. 지방대학이 성장하면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어 활발한 산학연 연계 활동으로 지방의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해냄으로써 쇠퇴해가는 지방을 살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방의 중소기업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므로 지방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수도권을 향한 기업의 일방통행을 억제하고 오히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상 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획기적 저출산 대책: 지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야말로 국가존망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까지 취해온 저출산 대책을 능가하는 참신한 정책을 지방 단위에서 시행하여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 충북 영동군의 사례처럼 통 큰 예산 투입으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주택에 획기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거주 청년이 지방으로 이사 오는 경우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문제가 청년의 미래 개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불평등은 과도하므로 자산 불평등을 타파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료: 서울 사람이 지방에 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병원이 적어 의료 기회가 부족한 데 있다. 의사들도 대도시 근무를 희망하고 지방 중소도시를 기피한다. 그래서 의료 기회의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 부족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되 지방대 졸업 의대생은 우선적으로 지방에 근무하도록 해서 지방의 의료 기회를 확충, 의료의 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지방마다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여 큰 병에 걸려도 구태여 서울 가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 개혁: 엄청난 과외를 어릴 때부터 강요하는 현행 대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고통에서 구해냄과 아울러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수능고사를 유지하되 그 비중을 낮추고,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학교장의 추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교과별 평가를 교사별 평가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점수 이상의 학생에 대해 추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구태여 서울에 가서 어릴 때부터 과도한 경쟁에 내몰릴 필요 없이 시골에서 메뚜기, 물고기를 잡으며

인격과 품성을 도야하면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진정한 경쟁은 초중고가 아니라 대학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교육,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5대 정책을 조합하여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서울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무조건 안 된다는 패배주의, 현상유지론으로는 서서히 말라죽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서울과 지방이 윈-윈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전국이 고루 균형발전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한울아카데미. 2004
- 변창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재생은 어떻게 가능한가?”. 선우재. 정치교육원 제1기 정책정치 전문과정 강의노트(미출간). 2024
- 성경룡 등.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2004
-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urs*. 1897(『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신복룡 역)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8강

‘지방소멸’의 시간들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 인류학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대 중국학센터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빈곤, 청년, 통치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현장연구를 수행 중이다. 『빈곤 과정』, 『연루됨』, *The Specter of “The People”* 등을 썼다.

소멸과 생성 사이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농촌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는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40년까지 일본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논의는 곧바로 한국에 번역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만연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마스다 보고를 토대로, 감사원은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되리라 전망했다. 쇠락 지역이 국가 예산을 빨아들이고,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과부하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례 없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사라져 없어짐’이라는 소멸의 사전적 의미를 떠올려 보자. 46억 년 지구 역사에서 생명체가 사멸했던 순간들을 가리키는 데 쓰였던 단어를 지방에 붙이는 게 합당한가? 인간이 줄어든다 해도 다른 생명체는 살아남을 것이다. 빈집 철근 사이로 잡초는 무성히 자라고, 고양이는 어슬렁거린다. 확실히 ‘지방소멸’은 인간 중심적이며,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론적 시간성을 품은 수사다. 더구나 지방의 소외와 낙후가 발전의 ‘부작용’이 아니라 한국 산업 자본주의 역사의 체계적 산물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묵시론이다. 수도권이 연구개발·관리·금융·행정·기업 본사 등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이 생산기지나 원료·자원의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위계적 분업구조가 빚어낸 불평등의 공간화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더욱 노골적인 경관이 되었다. 발전의 후과後果를 발전의 서사에 기대어 논하는 위협의 서사는 더 ‘혁신적인’ 발전을 해결책으로 주문한다. 이 공론장에서 지방은 스마트팜, 메가시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전략이 실험되는 프런티어frontier로 부상한다.

하지만 디스토피아적 미래성이 지방을 둘러싼 공론장을 완전히 잠식한 것은 아니다. 기후재난, 전염병, 금융자본주의, 지정학적 위기 등 불확실성이 전면화된 시대, 발전과 진보가 더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는 역으로 지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움직임을 추동해내고 있다. 행성적 위기와 인간 사회의 위기가 중첩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야 할까? 근대성의 중심 지향적 논리를 거부하면서 지방을 공동체, 돌봄, 자치, 여성주의 실천의 핵심 현장으로, 새로운 체제 전환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방소멸의 시간들

지방에 관한 논의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시소를 타지만, 지역민들의 구체적 삶에서 미래란 언제나 복수로 등장한다.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도, 생성에 대한 기대도 선형적 시간의 양극단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양자가 피비우스의 띠처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소멸’의 시간은 언제나 복수로 등장한다. 인류학자 발렌타인과 하순은 ‘공동의 미래’를 선불리 전제하기 전에 ‘공통적이지 않은 미래들’을 세심하게 고려하길 제안한다. ‘미래’는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어떤 스케일로 등장하는가? 어떤 종류의 수수께끼, 문제 또는 해법으로 등장하는가? 복수의 시간, 복수의 미래를 펼쳐 보이는 일은 서로에게 공통적이지 않은, 장기간에 걸쳐 위계화·분절화된 과거‘들’, 현재‘들’, 미래‘들’을 포착하면서 권력 관계의 주름들을 톺아보는 작업이다.

‘지방소멸’의 시간을 복수화하는 기획은 단순히 인간 중심, 국가 중심의 선형적·목적론적인 시간에 균열을 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의 유동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행위자들이 자신이 얽힌 여러 겹의 시간과 협상, 조율, 갈등하는 과정을 살펴야만 ‘지방’이라는 의제와 관련해 제기되어 온 소외와 배제, 착취와 수탈, 빈곤과 불평등, 실험과 대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지역에서 누가 현재의 상태를 위기와 재난으로 먼저 인지하는가? 누가 ‘소멸’이라는 걱정의 묵시론에 감응조차 할 수 없는 ‘느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가?

‘지방소멸’의 통치: 청년×지역

한국 사회에서 지방소멸이란 화두는 다양한 시간을 품고 있으나, 정부 주도 아래 통치 레짐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을 특정 방식으로 마름질하고 있다. (여기서 레짐regime이란 제도, 법규, 지식, 기술 등 일련의 장치들이 행위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특정한 주체(성)가 형성되는 장을 일컫는다.) 이 레짐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지방소멸’의 증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재정 지원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이 레짐에서 두드러진 행위자는 청년이다. 도시 청년의 농산어촌 이주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정부, 기업, 대학, 민간단체의 다양한 파트너십 하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대기적 시간을 제도화·규범화한

근대적 시간성에 따라, 청년세대는 ‘임금 노동을 통한 사회적 생산과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인구 재생산을 준비해야 할 집단’으로 전제되며, 정착, 취업, 창업, 활동, 실험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핵심 역량으로 호명된다. 수도권에서 고용·주거 불안을 감내하던 청년과 초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잃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복안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 내가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 중인 경상도 소래군(가칭)의 경우,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주 청년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1960년대 20만이 넘었던 소래군 인구는 5만 이하로 줄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군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도시 청년 유치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청년 유치를 전담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도시 청년 살아보기, 예술가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도시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군 외에도, 상급 정부와 기업, 재단, 대학이 각종 공모사업을 마련해 청년들의 이주와 정착을 유도한다. 중간 지원 조직의 직원, 각종 프로젝트 기획자, 실무자, 참여자,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영업자와 농부 등 이주 청년들의 구성은 실로 다양하다.

이주 청년 지원사업의 시간성

‘지방소멸’ 통치 레짐은 소멸이라는 묵시론적 시간을 ‘프로젝트의 시간’으로 분절해낸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 청년들은 기한 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때로 도시에서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 프로젝트가 특정 시기에 특정 시간 범위를 두고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들의 관심은 주어진 시간 안에 지표화된 성과를 구현해내는 데 집중된다. ‘소멸’이라는 아득한 시간은 공론장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신 소래에 “조금 일찍 왔으면”, “조금 늦게 왔으면” 지원금을 더 받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새어 나온다.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 그 성과가 주어진 시간 안에 실현 가능한가를 두고 정부와 사업 위탁 기관, 공무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분절화된 프로젝트의 시간은 다른 시간과 교차하며, 때로 마찰을 일으킨다. 청년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정부의 행정 사이클에 맞춰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와 겹친다. 결과보고서 작성과 평가를 고려해 연말까지 사업 집행을 마무리하다 보니 행정의 시간과 선주민의 시간이 어긋난다. 프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청년들이 두 층위의 시간을 조율해 행사를 마련해도 정치의 시간과 충돌하기 일쑤다. 정부 지원을 받아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한 청년들이 “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하니” 일정을 바꾸라는 공무원의 요청에 당황해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제도화된 선거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건물이든 축제든) 선출직 관료나 정치인의 임기 안에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사실 프로젝트의 시간은 이주 청년의 삶의 시간과 조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류학자 로라 베어 Laura C. Bear가 자본주의 현대성의 특성으로 본, 시간을 자본의 단기 생성과 가치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축약해버린 ‘ 지배적 시간-지도 dominant time-maps’에 이들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진보적 믿음이 해체된 시대에 성장한 도시 청년들이 프로젝트의 분절된 시간성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이주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의 근대적 생애 과업을 전제하면서 출발했으나, 만성화된 고용 불안, 극심한 경쟁,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은 많은 (특히 여성) 청년이 결혼, 출산, 양육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거나 거부하도록 만든다. 미래를 공간화할 자원이 부족한 이주 청년들이 정착보다 부단한 이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풍경을 (언론이 흔히 묘사하듯) 이른바 ‘MZ세대’의 자유로움, 노마드 문화로 마냥 긍정할 수 있을까? 단기성 사업의 시간성은 이들의 (어느 정도는 강제된) 유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때로 우리는 자연의 시간을 감지하면서 프로젝트의 시간이 만든 기이한 조형성을 깨닫는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은 내가 만난 이주 청년들이 비슷한 내용과 문법으로 반복되는 프로젝트를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사업에 몰입한 채 ‘지방소멸’을 무미건조한 정책 언어로 반복하던 청년들이 “진짜 소멸”의 순간을 실감했다. 어떤 청년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집이 전소된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재난 복구 때문에 지원사업 예산이 끊길 상황을 우려하는 자신을 낮설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 ‘청년’과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지방에서 로컬로?

앞서 언급했듯, ‘지방소멸’이라는 의제는 지구적으로 살피야 할 위기를 국민 국가 테두리로 영역화하고, 지방을 낙후와 퇴행의 상징으로 만든 발전주의 이데

올로기에 기대던 채 그 사라짐을 애도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 단어가 정책 공론장 너머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지방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일 테다. 인프라 부족과 마모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탈성장’을 강요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되묻고 있다.

그러나 이주 청년 지원사업에서 보듯, ‘지방소멸’ 통치 레짐은 파국의 시간을 행정과 정치, 프로젝트 수행과 감사監査의 시간으로 잘게 분절함으로써, 이 과정에 연루된 행위자들이 ‘소멸’을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쟁점으로 만들 가능성을 훼손한다. 이 통치 레짐은 지방을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온 구조적 위계와 폭력을 공론장 바깥으로 밀어낸 채, ‘무거운’ 지방을 ‘가벼운’ 로컬로 번역해낸다. 로컬 비즈니스, 로컬 브랜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프러너 등, ‘로컬’은 살아보기, 창업지원, 문화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수행자를 모두 포괄하는 지시어로 작동한다. 연로한 주민이 대대로 살아온 집터와 평생 일군 받은 산불로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로컬’ 명명이 붙은 온갖 사진과 콘텐츠는—그 대상이 이미 망하거나 사라졌음에도—좀비처럼 온라인 공간을 떠돈다.

수도권 시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방’과 ‘로컬’이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되고 등장하는 과정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을까? 수도 서울의 공연 무대에서 펼쳐진 로컬의 향연 이후, 우리는 이 과정에 어떻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